대한언론

Korea Journal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대표전화 02)732-4797~8
Fax 02)730-1270
E-mail kjc1405@kjclub.or.kr

SINCE 1977 www.kjclub.or.kr 月刊 11 2026년 11월 1일(일) 제 488호

이재명 정부 집갑 폭등 외교 안보 총체적 위기



김 화
본회 이사 · 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지난 10월 16일 취임 500일을 맞은 이재명대통령이 집값 폭등, 외교미숙 등 잇단 악재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6월4일 '국민주권정부'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월16일 취임 500일을 맞았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유연한 실용은 외면하고 이념과 정파에 의존했다. 취임 초 60%대 지지율은 30%대로 반 토막 났다. 집값 상승, 주식시장 폭락, 사법제도 파괴, 북한유화정책, 한·미동맹 균열, 외교 미숙, 인사 망사, 치안불안 등 쏟아지는 악재로 점철돼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나 판단이 충성심만 넘치고 영혼 없는 각료들에 의해 곧바로 정책으로 집행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대통령의 "농지에 투기가 몰리고 있다"라는 말에 뜬금없이 제기된 농지전수조사는 이런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개된 국무회의는 대통령만 보이고 각료들은 충실한 기록원 같다. 대통령은 넘치는 자신감과 일상의 사소한 일까지 챙기는 만기친람식 부지런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이 시의적절하고 나라의 안보와 살림에 보탬이 되고 국민의 삶에 유효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정비보다 쉽다"고 장담했지만 서울 집값은 취임 이후 단 하루도 내린 적이 없다. 서울 아파트 값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의 85주 상승기록을 넘은 역대 최장 신기록을 경신했다. 문 정부 당시 85주 동안 누적상승률은 7.7%였지만 이 정부는 86주 동안 17% 넘게 급등하며 상승폭과 속도는 심각하다. 집값안정의 지름길은 공급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면서 수요억제에 방점을 찍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유일한 방편인 은행대출부터 통제했다. 규제 직후 집값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곧이어 급등하는 악순환으로 복귀했다.

특히 토허제 구역 실거주 의무로 서울 전세매물이 움츠리면서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이 바람에 월세가 전세비율을 추월하며 상승했다. 월세 상승폭은 1년 새 15%를 넘었다. 서민들은 월급받아 월세내고 나면 생활비가 쪼들리는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을 성찰 없이 복습하다가 실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지지율 급락의 첫 째 원인이 집값 상승임을 뒤늦게 깨닫고 10월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정부는 초기부터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증시로 몰기위해 부양책을 쓰며 "집을 팔아서라도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다. 이 바람을 타고 젊은 세대는 집을 사기 위해 모은 돈을 몽땅 털어 주식을 샀고 심지어는 빚을 내서 주식 사는 '빚투'까지 감행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하려고 단일종목 레버레지ETF를 실시해 놓고 주식이 폭락하자 손놓고 있다. ETF에 투자한 주식은 반토막이 났고 개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34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이 정권에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않고 "누군가가 결정 했겠죠"라고 남 말하듯 지나갔다. 10월15일 코스피는 950포인트 넘게 빠지며 장중 한 때 9% 밀렸고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1998년 도입된 후 지난 해까지 6차례 뿐이었는데 올해만 벌써 10번째다. 최근 7개월 간 지수의 21%가 증발했고 하루 낙폭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최고의 3배가 넘는다.

〈2면에 계속〉

알림(社告)

대한언론인회 총회 및 송년회

일시 | 2026년 12월 8일(화) 11:00~13:30
장소 |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알림(社告)

『대한언론인회 50년史』 100字 발언 원고 모집

본회는 내년 2027년 4월 7일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광복과 전쟁, 혁명과 산업화의 격동기 속에서 언론 자유, 언론의 정도를 지키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로,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열정을 쏟아온 대한언론인회 50년, 그 소중한 언론사적 발자취를 종합, 『대한언론인회 50년史』를 4×6배판 700면 정도로 발간합니다.

컬러화보, 권두논문, 제1편 총론, 제2편 발전과 중흥, 제3편 언론과 공익, 제4편 출판과 문화, 제5편 미래비전 및 부록으로 엮기 위해 편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원고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5편 미래비전' 중 〈미래를 향하여〉 장(章)을 본회 발전을 위한 회우 여러분의 고견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대한언론인회 50년史』〈미래를 향하여〉 100字 발언 ▲주제 ; 자유 발언(예 ; '대한언론인회와 나' 등 자유)
▲길이 ; 100字까지(字數-엄수) ▲마감 ; 선착순 100명 (단, 100명이 접수되는 대로 마감)
▲접수 ; 본회 이메일 kjc1405@kjclub.or.kr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회장 이종세

실용·민생보다 이념·정파 우선

은행대출 통제…서민들 마이홈 꿈깨

〈1면에 이어서〉

국민연금은 그동안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18조 원, 2011년 유럽재정위기 때 13조 원을 투입해 안정시켰다. 그러나 올들어 외국인이 210조 원 순매도하며 한국증시를 현금 출납기 취급하는 사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는 대신 비중상한선을 14.9%에서 20.8%로 올렸다.

외국인이 차익을 챙겨 빠져나갈 때 고점에서 그대로 품고 있었다.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는 자산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자충수였다. 국민연금은 7월 말 기준 국내주식 비중이 24.87%로 이미 목표치를 4% 넘게 웃돌아 규정상 살 수가 없었다.

7월 한 달 국내주식평가 손실액이 124조 원에 달했다. 비쌀 때 비중을 줄이지 못한 결과 국민노후자금에 손실을 안겼다. 원인규명과 대책이 없다면 국민노후자금 손실과 개미들의 빚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역대 민주당정권은 모두 북한정권에 저자세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북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방송 일체를 중단했다.

한·미훈련을 축소조정하고 군사분계선 부근 군사훈련도 중단시켰다. 그 사이 북은 국경선을 요새화하고 군사분계선 남까지 내려와 지뢰를 매설, 우리 장병 3명이 부상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선 북한매설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부상당한 참사를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

이 정도면 짝사랑을 넘어 구걸이요, 스토커 수준이다. 이러니 최전방 초소 빈총 경계에 국민은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안보이자 경제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남북대치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켰고, 근대화와 민주화를 일궈냈다. 이 대통령이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대북불법송금사건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정부의 인내심은 선택적이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진즉부터 인내해 왔고 우리상선을 공격한 이란에도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는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 합의를 어겼다면 잘못은 가려야 한다.

우리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해서 대사소환에 이어 공관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0월 19일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조치에 반발하며 군사력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20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임진강변에 설치된 북한 대남 확성기. 〈연합뉴스 제공〉

대북 유화정책에 안보는 뒷전
美, 국정원 배제…한미동맹 균열

철수까지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국익이나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외교관계에서 무슨 실익이 있는지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 러·우 전쟁은 세계1차대전보다 긴 5년 째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힘겹게 싸우고 있다. 이 전쟁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군 1만6,0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북·러 군사협력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은 우리 기업의 실리와도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지켜온 한·미동맹 기준을 준수하라"고 요청할 만큼 한·미관계 균열은 커지고 있다. 반대로 주한중국대사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중·한 관계는 올바른 궤도로 돌아왔다"고 만족해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장소 공개로 미국은 북한정보 제공을 7개월 째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미국비자 보류와 국정원직원의 비자발급이 지연되고, 그간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해 온 미국이 최근 3국 실무회의에서 한국 국정원을 배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자주와 실용' 외교 발언은 여러모로 한·미 간 균열을 해결하는데 도움은커녕 악재가 될 수 있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백악관 고위급과의 협의가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실토했다.

오늘의 세계는 키신저가 말한 이성에 바탕한 국제질서의 데탕트 시대가 아니다. 힘과 거래에 의한 강대국이 중소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제국주의 시대다. 지금은 다자외교보다 군사동맹외교나 가치동맹이 절실한 시대다.

이 정부의 인사는 '패밀리 인사'로도를 넘고 있다. 정권을 잡으면 국정철학이 같고 능력 있는 인사라면 측근이라도 기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역대정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장동, 백현동 등 특정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패밀리'에게 정부 중요직을 맡기고 있다. 언론등에 따르면 청와대엔 이태형 공직기강 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이 자리 잡았다. 외교 경력이 전혀 없는 차지훈 변호사는 주 유엔 대사다. 나승철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도 변호사 패밀리다. 이승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시키려다 여론이 좋지않자 그대신 외교경력이 전무한 그의 누나를 미국 휴스턴 영사로 기용했다. 매형 임광현은 국세청장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의 주례를 맡았던 하동근은 면접에서 하위권이었는 데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박균택, 김동아 등 '패밀리 변호사'는 국회로 진출했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권력자체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가 없는 권력은 정의가 없는 폭정에 다름 아니다.



형사사법 체계 수렁속에 빠졌다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AI논쟁 불러



이도선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왼쪽) 10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치권이 난데없는 인공지능(AI)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 하루 만인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 부른 게 발단이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제미나이의 답변으로 수사 중립성 훼손 우려를 일축했다. 앞서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배석은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우기더니 생성형 AI인 제미나이까지 끌어들여 떼를 쓴 것이다. 그러나 국무위원이 아닌 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은 의장인 대통령의 재량 사항일 뿐으로 위헌 운운은 가당치 않다.

각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인터넷에는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더니 ~"로 시작하는 각종 밈이 떠돌며 대통령의 발언을 비꼬았다. "국정을 AI에게 묻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에서 "제미나이가 대통령이네"에 이르기까지 온갖 비아냥이 나돌았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이자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며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에 검찰총장을 배석시키지 않은 역대 대통령 모두 탄핵감이었단 말인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엔 관할 장관이 청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와 기소의 독립과 공정성을 위해 정권과 거리를 두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공석인 공소청장과 경찰청장도 임명하는 대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단다. 입법 취지 따위는 나 몰라라다. 제미나이든 챗GPT든 늘 따라 붙는 "AI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란 문구가 그의 눈엔 안 띄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처럼 중대한 국정을 AI에게 물어보고 그 답변으로 반박할 리 없다. 친여 성향인 참여연대조차 "수사·공소 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으나 거들떠도 안 본다.

이 대통령의 속셈은 뻔하다. 그의 신경은 온통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에 쏠려 있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이 매번 국무회의 말석에서 대통령 말씀만 받아 적는 처지라면 정권 비리 수사와 기소에 부담을 갖게 마련이다. "그럼 지휘·감독을 공개회의가 아닌 밀실에서 하란 말이냐?" "검찰총장이 배석하지 않을 때엔 검찰이 중립적이었느냐?"는 그의 반론에서 음흉한 저의가 읽히는 것도 그래서다. '검찰의 정치화 청산'이란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에 초장부터 "정권의 하수인 노릇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지만 영 미덥지 않다. 그동안 TV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무회의나 업무 보고를 통해 장관과 기관장 등에게 시시콜콜 따지고 지시한 게 어디 한두 번인가? 실제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위례 개발 비리 수사 증거 조작 사건 등 그가 진상을 규명하라며 '수사지침'을 내린 사안들이 대부분 막대한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빈손으로 끝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본인 입으로 국무회의에서 "과거 검찰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겐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윽박지르지 않았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자신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모두 검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장본인이 바로 이 대통령이다. 일부 사건은 공범들의 형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는 데도 천연덕스럽게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이 대통령이 전과 4범이란 사실도 그의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 단단히 한다.

지난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의 발족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엉망진창이 됐다. 공소청장은 아직도 공석이고, 중수청은 여권의 내란(?)으로 이 대통령이 낙점한 청장 후보자가 취임도 하지못한 상태에서 수사인력이 정원의 30% 이상 채워지지 않은 채 '개문발차'를 강행했다. 전산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고 청사 등 주요 시설은 아직도 공사 중이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몹시 의아하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지만 이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과 혼란, 수사권의 경찰 집중과 남용, 기관 간 권한 갈등 등 숱한 부작용이 눈앞에 훤히 내다보인다.

말이 좋아 검찰 개혁이지 이보다 더한 개악이 없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검찰을 없앤다지만 패악의 범위와 수준이 이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정치는 왜 손대지 않나? 잘못이 있다고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만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공소 취소도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범죄를 지워 버리려는 범죄자들의 터무니없는 야욕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둑들이 포도청을 꿰차고 앉아 과거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한 포졸들에게 호통치는 형국이다.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몰상식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크나큰 불행이다. 이 대통령은 늦기 전에 그릇된 행보를 멈추고 합리적인 지도자의 정도로 돌아가야 한다. 시민들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할 뿐이다.

도둑이 포도청 꿰차고 앉아 호통치는 꼴

‘얼음과 숯’ 한미관계 왜 이렇게 변했나

북한 비핵화-대북 대화 양국 전략 엇갈려

특별기획 ‘전작권 전환’



송대성
한미연합회(AKUS) 한국 회장, 전 세종연구소장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미결속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좋은 역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중 하나다. 대한민국 70년 역사 속에서 미국은 한국의 보은국(報恩國)이요, 한국은 미국의 보람국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한국전쟁에서 한국의 생존, 그리고 전쟁의 폐허로부터 세계 10위권으로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그 희생적인 지원들을 한국인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경제와 안보 두 영역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국력 면에서 미국과 ‘지구촌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파트너가 되어 있다.

지난 70여 년의 한·미관계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어떤 속성의 정부냐에 따라 요철관계(凹凸關係)를 보여 왔다. 한·미관계 속에는 양국 간 갈등의 요소들도 많이 있고, 결속의 요소들도 많이 있다. 진정한 한·미 간 결속을 위해서는 실제로 내재해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 요소들을 해소하는 일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 간 한·미관계는 한마디로 ‘빙탄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얼음과 숯이 한 물속에 함께 둥둥 뜨면서도 서로 합해지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의 한·미관계가 빙탄 관계가 되어있음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그 정치체제 속성들이 빙탄 관계를 유발케 하는 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좌파정부로 명명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시에 ‘실용주의’ 깃발을 들고 대미 관계에서 미국과 유대강화를 위해 한동안 노력들을 했다. 강한 우파 정부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실체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거수일투족을 치밀하게 고찰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성 미흡과 친북·친중성이 강한 좌파정부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과 이재명 정부는 그 화학적 유대강화가 어렵다는 인식을 보유하면서 한·미 간 빙탄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접근 방법의 차이가 한·미 간 빙탄 관계를 형성케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핵 개발 중단(stop), 감축(reduction), 폐기(dismantlement)’라는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만 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접근법은 실질적인 북핵폐기를 포기한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이라고 인식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셋째, ‘대북 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빙탄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각각 ‘대북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대북 대화를 달성키 위해 한·미 간 군사훈련 중지/축소도 함께 이행했다. 한·미 간 군사훈련 축소와 중지를 이행하면서도 미국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역량 훼손을 우려하면서 전술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역량 훼손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고 대북 대화를 추구한다는 인식을 미국 정부는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빙탄 관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전략적인 인식 차이가 빙탄 관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만·인도·태평양 지역까지 광범위한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역무를 탐탁지 않게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인식을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인식으로 이해하면서 빙탄 관계가 되어 있다.

다섯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빙탄 관계를 도출케 하는 요소들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외형적으로는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한국 이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전환의 시기’를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은 오늘날 전쟁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전작권 한국 이양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 전쟁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 육·해·공·해병대와 주한·미군의 전력만이 동원되는 것이 아닌 우주와 사이버 공간, 정보·감시·정찰 자산, 정밀타격 능력, 지휘통제체계와 군수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영역전쟁(System Warfare)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다영역전쟁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자산들은 미국본토, 괌, 오키나와 등 미국국방성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다. 이러한 자산들을 한국군 전쟁지휘관이 한반도 유사시 지휘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10월 14일 제이비어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 작계도 바뀌었기 때문에 충족해야 할 새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새로운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의 강신철 국방장관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전환 시기를 중시하며 공개적인 충돌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빙탄 관계의 극명한 예다.

마지막으로, 통상과 투자문제와 관련 한·미 간에는 빙탄의 요소들이 있다. 한·미간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와 초기사업추진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는 밀고, 당기고,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 이행속도에 대한 견해차 등이 빙탄 관계의 원인으로 노정되고 있다.

현재의 한·미관계가 빙탄 관계를 벗어나 안정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1) 북한과 대화는 ‘북한 핵 비핵화’라는 최종목표와 확고한 한·미연합방위 태세 유지/훼손방지라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2)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역할조정은 정치적 구호 차원이 아닌 실질적 군사 능력과 한·미 간 전략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되어야만 하며, (3) 통상과 투자 분야는 양국의 상호 국가이익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신뢰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4) 한·미 양국 정부의 속성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현대 국제정치의 속성인 ‘복잡한 상호의존성(Complex Inter-dependence Relations)’을 중시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보은국’이라는 차원에서 한건 한건 해결해야만 한다.

‘전환의 시기’ ‘필요한 조건’ 공개적 충돌

무지·무식·무뇌서 비롯된 '안보자해극'

전작권은 한·미대통령 합의가 선결과제

특별기획 '전작권 전환'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한·미 군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아파치 헬기들이 정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를 조기 종료 한뒤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전작권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주권' 또는 '군사주권'의 회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 언급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권 국가는 반드시 자국군의 작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작동과 운영 과정을 보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첫째, 전작권은 전시에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미 양국 대통령의 합의가 있어야 작동되는 권한이다. 즉, 전작권은 양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전쟁(Hostalities)이 발생했다는 데 공식적으로 합의해야 작동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작권 보유가 우리 주권의 포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둘째, 전작권은 연합사령관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다. 전작권 발동 이후 한미연합사의 주요 작전과 전략적 지침은 모두 한·미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한미군사위원회(MC)에서 결정된다. 한미군사위원회는 평시·전시를 막론하고 상시 가동되며, 실무회의와 화상회의(VTC) 등 긴밀한 접촉과 조율하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 미국 국방 당국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

셋째, 전작권의 양도는 '군사주권'의 양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작전통제권과 작전지휘권은 전혀 성격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OPCON)은 한·미 양국 정부가 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한 권한이다. 그 반면 작전지휘권(OPCOM)은 작전 외에도 인사, 군사 행정, 군수 지원, 조직 편성, 군사 교육, 훈련 등 군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권한이 포함되며 양국 군은 평시와 전시 모두 인사권, 군사 재판권, 예산 편성권 등 국가 주권에 속하는 고유한 권한은 계속 유지한다. 따라서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작권 양도는 '군사주권' 양도 아니다

넷째, 한·미연합 체제에서 일부 '자율성의 제한(Limitation of Autonomy)'은 불가피한 '동맹의 비용(Cost)'이라는 점이다. 동맹은 정치·경제·군사적 이득(Benefits)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또 그 불가피한 비용(Cost) 가운데는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위험뿐 아니라 '자율성의 제한'도 포함된다. 따라서 동맹관계에서 비롯되는 일부 자율성의 제한을 주권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 미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은 작전통제권을 미군 장성인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에게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군사주권의 양도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반도 전작권과 마찬가지로 NATO 전작권도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행사하지만 정치적 주요 결정은 북대서양이사회(NAC)가, 군사적 주요 결정은 군사위원회(MC)가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작권 문제가 진정 '주권의 문제'라 생각한다면, 만약 앞으로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게 되면, 우리가 미국의 군사주권을 빼앗았거나 미국이 우리에게 군사주권을 넘겨준 것이라 할 것인가? 연합사령관의 전작권 행사는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기능적 역할을 분담한 것인데, 이를 주권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난 30여 년간 좌파 정부는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환영(幻影)을 좇아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다 많은 것을 잃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수용했고, 북한 방어는 한국이 맡고 미국은 핵억지력 유지 등 중요한 지원만 담당한다는 미국의 계획(NDS)에 아무 소리도 못했다. 우리가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고 자체 방어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한것은 업보이다.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해 35조~43조 원을 투입하고 2030년까지 250억 달러의 미국 군사장비를 구입하며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2%(62조 원)인 국방비를 2035년까지 3.5%(93조 원) 수준으로 증액을 하겠다고 앞장서 약속했다.

미국측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엄격한 조건 평가를 강조하는 것을 전작권 전환을 미루려는 의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면 안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의 언급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전략이란 고정불변의 상수가 아니라, 전략 상황 변화에 따라 진화해야 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 합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중·러 권위주의 삼각동맹이 새로 형성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안보 환경과 안보 위협의 실체가 판이하게 바뀌었는데, 과거의 기준을 고집하며 "골대를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이념의 제단에 바치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미국은 전쟁 책임자·전쟁 지휘자에서 지원자로 물러나 대북 억지력이 큰 타격을 받는다. 또 미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것이라 시사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양자 동맹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설 연합사 조직을 가진 우리 안보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전작권은 군사적 효율성에 근거해 맡기는 것이 옳다. 이제 무지, 무식, 무뇌에서 비롯된 허울뿐인 '자주'와 '주권'의 환영(幻影)에서 벗어나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법원장 예외없어” vs “정권 몰락의 길”

조희대 탄핵 논란-삼권분립 훼손 정면 충돌



문관현
본회 편집위원
연합뉴스 부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범여권 강경파는 조속한 탄핵 추진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실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는 물론 행정부까지 얽힌 헌정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6일 당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모든 방법과 경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진사퇴를 압박하던 기존 입장에서 탄핵 추진까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국민 세금과 공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에서 대법원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 지도부에 결단을 압박했다.

현행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발의에는 100명, 가결에는 151명이 필요하다. 의석 구도상 범여권의 결집 여부가 국회 통과의 관건이지만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불신임이 아니라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는 엄격한 법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업무추진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와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잔여 임기도 변수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에서 임기 만료로 파면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탄핵심판이 장기화될 경우 조 대법원장 사건에서도 임기 만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대법원장 탄핵은 헌정사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다.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지만,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탄핵 추진이 정권에 심각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이 정권 몰락의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의 책임 소재를 문제 삼으며 탄핵 추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대법원의 모든 재판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정지되는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의 권한 행사이며, 대법원장 직무대행 체제와 개별 재판부의 재판 기능은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재판이 중단되고 구속 피고인이 일괄 석방될 것이라는 주장은 법률적 근거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사이의 긴장에 있다. 대법원장이라고 탄핵의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 사법적 판단에 대한 정치적 불만만으로 탄핵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더욱이 탄핵은 국회가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인 동시에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적 보복은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 탄핵의 정당성은 정치적 구호나 의석수보다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헌법적 판단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

이제 정치권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 논의가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에 머물지, 실제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든 상당한 정치적·헌법적 파장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이 서로 견제하되 각자의 헌법적 권한을 존중하도록 설계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대법원장 탄핵 논란이 권력기관 간 정면충돌로 치닫지 않으려면 정치적 공방을 넘어 위법 사실과 탄핵 요건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장 개인의 거취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서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대법관 후보 재제청등 책임 추궁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부 압박

‘무지·반란의 야만시대’ 극복해야

이재명 정부 압박하는 내우외환



박석흥
본지 논설위원장
전 문화일보 국장



국민의힘 김형동 간사가 4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임기 4분의 1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이 30~40%대의 지지율·여권분열·외교 갈등·북한도발·실세들의 망언·실언 등으로 내우외환의 포로가 되어 국민은 불안하다. 지뢰 폭발·이종석, 정청래 방미 거부에 이어 한·미정보협력과 전작권 전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 한·미 관계를 전국민이 우려하게 됐다.

제이비어 브런슨 미군사령관이 “핵심조건이 충족 안 된 전작권 전환 실행은 위험하다며”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제기했고 미의회는 전작권 관련 견제 장치를 재확인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협의는 잘 되고 있다”고 낙관했다. 대통령의 낙관에도 한·미 관계가 혈맹 가치보다 이익을 계산하는 거래로 바뀐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다. 6·25전쟁으로 사라질 뻔 했던 한국을 구해준 미국의 도움이나 미국이 고군분투했던 베트남전에 한국군이 참전해 헌신적으로 도운 것을 두 나라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무리한 사법 리스크 방어와 386 케토의 퇴영화된 집단의식에서 형성된 역사인식과 사고를 ‘상식’과 ‘진리’라고 맹신했기 때문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한다. 2021년 7월 1일 이재명 후보자는 안동에서 “친일 세력들이 미점령군과 합작해서 다시 그 지배체제를 유지했지 않은가.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라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을 부정했고, 2025년 10월 18일 ‘여수14연대 반란’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항명”이라고 해석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 좌파의 발언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프로파간다를 복창한 것이라서 학자들은 우려한다고 했다.

좌파의 1948년 건국 부정은 미군정 음모에 동조한 친일 세력 지원으로 정통성이 결여된 정부가 탄생한 것이라는 브루스 커밍스의 가설과 “미제와 주구들이 세운 반동 괴뢰 정권의 출현이 민족분열의 위기를 강화시켰다”는 북한 「조선통사」의 프로파간다와 대동소이 한 것이다. 이 주장은 소련 위성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지휘했던 슈티코프 소련 연해주군관구 정치사령관이 스탈린에게 미주알고주알 보고한 문서와 당시 일본·미국·북한 문서로 이미 허구로 확인된 거짓말이다. 슈티코프는 소련과 북한이 먼저 분단에 착수했으며 남한 좌파 반란과 폭동을 슈티코프가 지휘·지원했던 사실을 문서로 남겼다. 반면에 하지 미국 사령관은 이승만을 늙은 망나니라고 비하하며 충돌했으며 이승만의 건국을 방해했다. 좌편향 국사학자까지도 안동발언을 시대착오적인 역사인식이라고 지적했으나 안동발언 수정은 없었다.

이화영의 무리한 사면 요구와 추미애, 서영교, 정동영, 최민희, 송영길 등 케토집단의 편향된 역사인식과 발언도 대통령 지지율의 변수가 되었다. 운동권 세력의 체제 변혁 주장과 좌편향 막말과 실언에 많은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한 1948년 헌정체계가 종언(終焉)을 고하고 중국·북한과 유사한 전체주의 체제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까지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과 급진 좌파의 공포 정치가 복합된 변혁이 대한민국을 엄습하여 기존 질서와 관습은 무너지고 미래를 예단할 수도 없어 사회는 혼란스럽고 국민은 아노미 상태다.

김진현 원로언론인은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건국100주년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를 질문했다. 이 질문은 사회주의 혁명과 종족적 민족주의에 몰입한 운동권 세력의 ‘위험한 혁명론’과 ‘환상적 통일론’이 정치·경제·사법 체계와 국민의 가치관·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40년 가까이 지속된 ‘분열·반동·변혁·배제·부정의 정치’와 ‘좌파의 전복전’으로 대한민국은 ‘무지·야만의 시대’와 ‘국가 전복’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국가전복 전야의 혁명 상황에서나 제기될 국가 정통성과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 조건과 관습 부정이 제 6 공화국에서 운동권세력의 주장으로 일상화 됐다.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은 문재인정부에서 최절정이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0월 18일 ‘여수14연대 반란’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항명”이라고 해석한 두달 뒤인 12월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환빠논쟁’을 화두로 좌편향 대통령과 뉴라이트 서양 사학자가 맞짱 토론하는 역사논쟁이 전국민에게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볼거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 같다”라며 사관을 강조했고,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은 “신뢰할 수 있는 사료가 정확한 역사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역설, 정면 대립했다.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원장 임기도 캐물은 이 논쟁에 대해 12월 18일 47개 학회는 위서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의 역사 논쟁 제기는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모순이라고 대통령의 ‘환빠 논쟁’을 비판하며 “가짜역사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밝히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토론 뒤 박지향 이사장은 해임됐다가 서울행정법원이 박 이사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했으나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통합안을 교육부가 발표했다. 학계는 역사학의 학문적 독립성과 국가 역사정책의 방향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반응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을 제창한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종족적 민중사관에 오염된 현행 국사교육은 학생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해 가는 아편과 같다며 “국사 교육을 전면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건국 80년 전야 대한민국 이념 논쟁은 건국 전후 좌우 이데올로기 싸움과 비슷하다. 우파의 완패다.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대한민국사를 사실대로 바로잡아서 좌·우 갈등을 풀어야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건국 80년에 왜곡된 대한민국사를 바로잡아 국가 정통성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이재명 정부가 ‘무지·반란의 야만시대’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외교갈등·여권실세 망언요인 ‘30%대 지지율’
좌파들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현재진행형’

K-수출 '1조달러 클럽' 진입 파란불

경제포커스 글로벌 기업 AI경쟁…반도체 수요 급증



조희곤
본회 편집위원
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수출을 위해 항만에 대기 중인 컨테이너 물동량.

글로벌 경기의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한국의 수출(K-수출)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는 수출 총액이 1조 달러(약 1,300조 원)를 돌파, '수출 1조 달러 클럽' 진입이 거의 확실시 된다. 1조 달러 진입은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인공지능(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버 인프라 확충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이에 필수적인 한국산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9월 수출 첫 1,200억 달러 돌파…글로벌 톱4 진입 길 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공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3.5% 증가한 1,209억 달러(164조2,729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달인 8월 수출액(982억 달러)보다도 227억 달러나 늘어난 수치다. 1,020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6월을 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이 결과 무역수지 흑자액은 498억 달러로 5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최근 수출 동향은 월간 수출액이 900억~1000억 달러 안팎을 달성하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올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총 8,145억 달러(1,106조7,019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7,093억 달러)을 9개월 만에 가볍게 뛰어 넘은 것이다.

지역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쟁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중동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역성장을 기록하며 우려를 자아냈던 미국과 중국 수출은 각각 57%, 76% 급증하며 확실한 반등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연합(EU) 및 주요 신흥국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물동량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세계 무역시장의 주도국(Major Player)으로 자리 매김

9월의 월간 1,200억 달러 수출 실적은 세계 주요 제조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올들어 월 평균 646억 달러를 수출하는 일본과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세계 3위 수출국인 독일(약 1,500억 달러)도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전반적인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연말 쯤 연간 수출 1조 달러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연간 수출 실적 1조 달러를 기록한 국가는 중국, 미국, 독일 3개국 뿐이다. 중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3조7,76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2조1,770억 달러)과 독일(1조7,740억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단일 국가의 연간 수출 1조 달러 클럽 진입은 국가 경제의 체급과 위상이 전 세계 최 상위권으로 격상됐음을 입증하는 상징적 이정표로 해석된다. 즉 세계 무역 시장의 주변부가 아닌 핵심 주도국(Major Player)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함을 뜻한다.

9월 수출 첫 1,200억 달러 글로벌 빅4 눈앞에
대기업 수출 vs 내수 침체 '양극화 구조' 개선해야

수출 호조에도 체감 경기는 싸늘…특정 산업 편중에 따른 양극화 탓

한국의 수출이 호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효자 산업인 반도체 수출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반도체 수출액은 60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3% 늘었다. 정부는 AI발 반도체 메모리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 호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9월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전체 수출액(1,209억 달러)에서도 절반인 603억 달러가 반도체였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단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월 수출액 신기록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면 수출 1조 달러시대 도래에도 왜 국민의 체감 경기는 싸늘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수출과 내수의 단절'과 '특정 산업 편중'이라는 구조적 착시현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시지표는 상승하지만 민생현장은 냉각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체감경기를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K자형 양극화란 시간이 갈수록 상단과 하단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착시현상을 나타내는 가장 큰 섹터는 반도체다. 반도체는 대규모 첨단 설비 투자가 핵심인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수출이 대폭 늘어나도 일자리가 이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업이나 자동차·유통 등 고용 유발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해 반도체는 서민 일자리 창출이나 가계 소득 증대로 직접 이어지기는 어렵다. 고물가·고금리 누적으로 줄어든 실질 구매력도 체감 경기를 싸늘하게 느끼게 하는 한 요소로 작용한다. 금리상승 여파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 소득 상당 부분이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는 자영업·소상공인 및 내수 소비축소로 직결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낙수효과의 소멸'도 빼놓을 수 없다. 과거에는 수출이 늘어나면 국내 부품·소재 하청업체의 지방 공장으로 온기가 퍼졌지만, 현재 주요 대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대응 및 현지 규제 완화를 위해 미국·EU 등 해외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국내 중소기업·자영업·가계로 들어가는 낙수효과 고리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대기업 및 반도체 중심의 경기 확장과 가계·자영업·중소기업 중심의 내수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양극화 구조에 놓여 있다. 거시지표(수출액)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지만, 대다수의 국민과 소상공인이 접하는 내수 현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이유다.

반도체 쏠림과 중국의 기술 추격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

어쨌든 AI 기술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빠르게 타서 세계 네 번째 수출 1조 달러 클럽 진입을 눈앞에 둔 것은 한국 산업계가 이뤄낸 위대한 성과이며 쾌거다. 또 이번 수출 호조세는 과거의 일반적인 경기 회복 국면과 달리 AI 기술혁명이 주도하는 구조적 상승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반도체 단일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중국의 기술 추격 등 극복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사상 최대 수출 행진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쏠림 현상'은 한국경제의 취약 구조를 그대로 말해준다.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향후 글로벌 정보기술(IT) 업황이 조정을 받거나 공급망 차질이 발생했을 때 국가경제 전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 단순한 물량 확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술 고도화와 품목 다변화, 그리고 공고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어떠한 글로벌 경제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수출 체질을 완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갈등,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北核은 대남공격 적화통일용이다”

이재명 대통령 ‘방어용’ 주장에 논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기하고 핵을 ‘공격용’, 그것도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할 ‘선제공격용’으로 공개 천명하고 법제화까지 했는데도 국가 최고 안보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방어용’이라고 말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19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언급하며 “핵무기라고 하는 걸로 실전을 치를 거냐.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도 김정은은 핵을 쓰지 않거나 선제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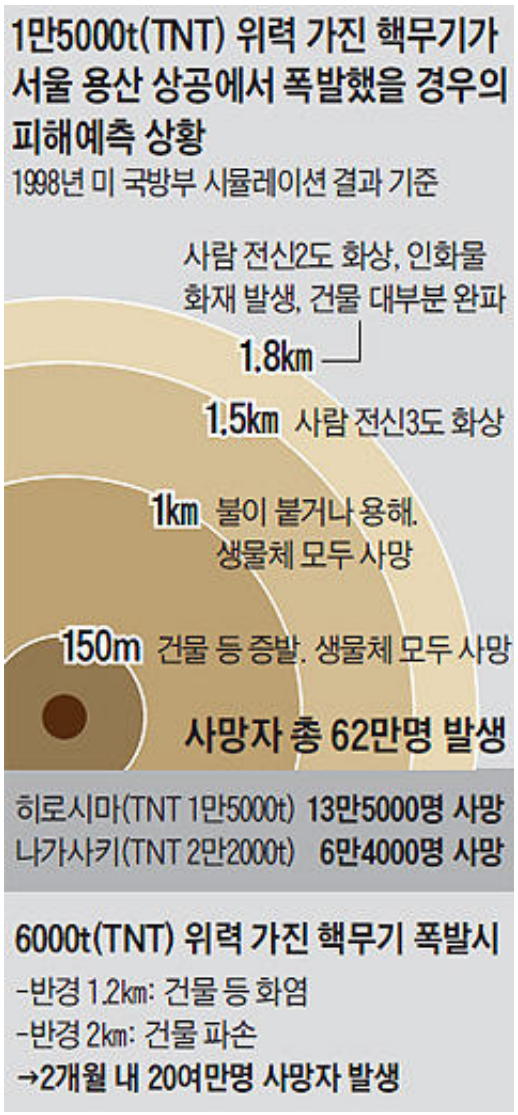
이 대통령의 북핵 ‘방어용’ 언급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위(자체방위)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체제보장용’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11월 12일 미국 방문 중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핵과 미사일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한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4일 한국에서 가진 미국 CN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체제보장론을 거론했다.

하지만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하는 방어무기라면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구(舊) 소련이 왜 체제방어와 영토보전에 실패하고 붕괴했는지를 이 대통령이나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련은 냉전 당시 미국의 1만 2천여기보다 훨씬 많은 1만 6천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했음에도, 영토보전 등 국가 존립위기를 방어하지 못했고, 그들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70여년간 유지해온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지 못했으며, 광대한 영토는 15개 나라로 쪼개지고 말았다. 미국이 총 한방 쏜 것도, 내부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전체주의 정치체제의 한계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의 영토 보전과 체제는 외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북한 내부에서 군사정변이나 인민봉기 등으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고 할 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국회)에서 개정한 헌법 서문에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헌법 서문엔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었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이어 2017년 11월 29일 초대형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의 시험발사가 성공하자 이날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이어 2022년 9월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이 참가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 선제핵공격을 법제화했다.

북한은 선제 핵공격을 명시한 북한 핵무력 정책 법령 제6조에서 핵무기 사용조건을 ①핵무기 또는 대량살육(생)무기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할 때 ②국가지도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할 때 ③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할 때 ④유사시 전쟁의 확대화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때 ⑤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 할 때로 규정했다.

이러한 핵무기 사용조건과 관련, 북한을 향한 공격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박 징후’만으로 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조건을 명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핵 위협에 대해서만 핵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또는 재래식 공격, 심지어 상황 자체가 불분명한 ‘파국적 위기 상황’에서도 맞대응으로 핵을 쓸 수 있게 한 점도 ‘핵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춘 조치다. 이는 비군사적 상황에서도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두는 등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법령 3조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선 “북한의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 김 위원장이 핵 사용과 관련한 모든 전권을 쥐도록 해놓았다.



핵무력을 통한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는 김일성의 ‘비밀교시’와 김정일의 ‘비밀지시’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 있으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를 간과해 왔다. 1987년 3월 17일자로 영변 핵단지에 비밀로 하달된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지시’에 따르면 북한은 처음부터 통일을 위해 핵사용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일성은 교시에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핵은 필수적” 이라고 했으며 김정일은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완성)하려 한다”고 분명이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영변핵단지에서 핵기술자로 근무하다 중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김대호(金大虎)씨의 저서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下卷’(예음, 1997)과 ‘核工場 の 眞實’(일본어판, 德間書店, 2003)에 드러나 있다. 그런데도 과거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친북좌파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공격용이 아닌 체제수호 목적의 방어용과 경제적 반대급부를 노린 협상용으로 판단해 왔다. 즉,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의도는 ‘대남적화통일용’이 아니라 그들의 ‘주특기’나 다름없는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가침을 보장받는 한편 핵포기 대가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은 오류였다. 우리는 핵개발 의도를 잘못 짚어 지난 30여년간 허송세월하면서 북핵 저지에 실패하고 말았다.

안보는 국가이익 중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으로 분류된다. 사활적 이익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익으로, 영토, 주권, 국민의 생명 보호가 포함된다. 경제는 망해도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지만 나라가 망하면 살아날 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안보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국가는 전쟁까지 불사하며 모든 것을 걸고 지킨다. 북한의 핵 위협이 한국의 사활적 이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의 1.5배, 군사력은 세계 5위라면서 북한이 설마 전쟁을 일으키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핵이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이 동족을 향해 핵을 쏘겠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김 위원장은 한국과의 동족관계 단절을 선언한지 이미 오래이며 핵 법제화에서 보듯 비군사적 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핵을 대남 선제공격에 쓰도록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평소 “가장 더러운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적이 넘볼 수 없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평화를 지키는 안보는 최악의 상황, 즉 0.0001%의 위기·위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시대를 노래하는 음악혁명가

“BTS에게 문화훈장 금관 수여하자”



전의식
본회 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부국장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은 축구대표팀 선수의 병역면제 발언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자, 남미대륙 순회공연 중인 BTS의 이름이 느닷없이 소환됐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BTS도 모두 군대를 갔다 왔다”라며 전역모를 쓰고 병역면제 해프닝을 벌인 일부 축구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이다.

멤버 7인으로 구성된 BTS는 2022년 리더 진의 입대를 시작으로 2025년 6월 막내인 정국의 전역을 끝으로 할 때까지 모두가 병역 의무를 완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정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는 데도 현역병으로 입대해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18개월 간의 군 생활을 마쳤다.

BTS의 입대 문제를 앞두고 열성팬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먼저 방탄소년단의 국위선양과 경제 효과를 생각하면 병역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어서 순수예술에 비해 대중예술을 차별한다는 불만도 나왔으나 당사자인 멤버들이 현역 입대를 자청해 찬반 논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BTS의 훈장 수훈은 세계 대중 음악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빌보드 200 연속 1위와 유엔총회 연설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화관장은 대한민국 문화훈장 체계에서 최하급인 5등급. 정부는 문화·예술인의 활동 공적과 연륜에 따라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으로 수여하며 금관은 한국을 빛낸 최고의 공로자에게만 주어진다.

당시 BTS의 경력이나 연령으로 보면 불만이 없을 상훈이었으나, 2026년의 위상은 그때와는 다르다. 한 여성 팬은 “세계에 K팝의 위세를 알린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1등급 훈장을 주어도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친 2025년 후반에 재결합한 BTS는 지난 3월 21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새 앨범 ‘아리랑’을 선보이는 글로벌 라이브 공연을 펼쳤고 이를 넷플릭스가 전 세계 190개 나라에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국제적인 화제를 모았다.

4월 9일부터 3일간 열린 고양종합운동장에서는 13만 명이 넘는 입장객이 관람했는데 내국인은 물론 BTS의 공연을 보려고 서울을 찾아온 외국인도 적지않아 국가 홍보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어 17일부터 2일간 열린 도쿄돔 콘서트도 큰 성공을 거두고 미국으로 무대를 옮겨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20만 명, 멕시코와의 국경도시 엘패소에도 10만 명의 입장객이 모였다.



K팝으로 세계대중음악계를 뒤흔든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 문화훈장금관을 수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018년 화관장 받고 전원 현역 군복무
팬들 “최고 등급 훈장 업그레이드 마땅”

이후 BTS는 라스베이거스의 4일 공연을 마치고 멕시코, 스페인, 벨기에,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콘서트를 마쳤고 11월 19일부터는 대만을 시작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호주, 필리핀 스케줄이 내년 3월까지 짜여 있다.

1년 동안 예정된 공연 일정에서 3분기까지 38회차 공연을 마친 결과 매회 10만 명 가까운 관객으로 초만원 사태를 기록했다. 유료 입장 관객이 총 231만 명이었고, 공연으로 벌어들인 입장료와 굿즈 판매 수입은 무려 6,37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BTS가 1년간의 월드 투어에 나서자, 영국 로이터 통신은 그들이 벌어들일 총수익이 약 18억 달러(한화 2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계 콘서트 사상 최고의 수익을 기록한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에 필적하는 수치가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가수의 공연 수익보다 더 큰 평가를 받는 이유는 콘서트에 따라오는 각 개최 도시의 지역경제 수입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외지에서 공연 관람차 찾아오는 여행객들로 현지 호텔의 객실이 매진되는 것은 물론이고 식당, 운수, 관광, 기념품 판매로 엄청난 경제 효과를 누린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다. 공연이 열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BTS 자국 공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인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멤버 7인을 대통령궁으로 초대해 국빈급 환대를 하면서 공연 횟수를 늘려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왔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내외는 파리 콘서트를 직접 관람하며 즐기는 장면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세계 대륙을 순회하며 공연을 펼치는 현장에서 10만 명 가까운 관객이 한국 민요 ‘아리랑’과 히트송을 떼창하는 장면은 눈물을 쏟을 정도로 감격적이다. 마치 1960년대에 ‘렛잇비’ ‘예스터데이’ 등의 명곡으로 세계 각국을 순회했던 영국의 4인조 록그룹 비틀스의 인기를 방불케 한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프로게이머 이상혁 씨에게 체육훈장 최고등급인 청룡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은 스포츠를 통해 국위를 선양한 체육계의 전설 손기정, 박세리, 김연아, 손흥민 선수에게 주어졌는데 e-스포츠에서 최고 실력자로 꼽히는 이상혁 씨는 국제 대회에서 6회 우승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자 “BTS는 왜 안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은 “우리는 1등급 훈장을 받은 문화·스포츠 인사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올해에 그들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 더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BTS의 위치는 70여 년 권력의 그래미를 사양할 정도로 유명하다”라고 반문한다. 칼럼니스트 박철성 씨도 한 매체를 통해 “문화훈장 금관은 문화예술 최고 등급이다. BTS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에서 그 기준을 충족할 아티스트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오로지 K팝 하나만으로 세계의 대중 음악계를 뒤흔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이그룹으로 성장한 BTS에 대해 우리 정부를 비롯해 관련 단체도 그들의 공로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여론이 있다. BTS는 이미 화관훈장을 받았으므로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 수훈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상훈법상 규정된 절차에 의해 새로운 공적이 인정된다면 대통령의 재가로 상위 등급 훈장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훈장은 수훈 대상자가 생존했을 때 받아야 빛이 난다. 절정의 활동을 할 때 영예를 받아야 더 의미가 있다는 점을 남겨 둔다.

탈북 청소년 요람

서울시 교육청 여명학교 신축 앞장선다

2028년 1월 착공…2029년 3월 이전 목표



이향숙
본회 부회장
수필가



지난 9월 17일 여명학교 건립을 결사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해를 바라는 조명숙 교장(푸른색 옷 입은 사람).〈연합뉴스 제공〉

탈북 청소년들의 요람인 여명학교의 신축에 대해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현 부지에 신축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다. 이로써 두 달간 벌어진 신축 찬반 운동은 긍정적으로 끝나게 됐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여명학교 학생들은 지역 봉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중엔 수의사나 은행원이 된 경우도 있다"며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는 따뜻한 교육이 이뤄지는 곳인데, 이런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교육감이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현재 공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 새 교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날 교육청은 2028년 1월에 건축 신고 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2월 안에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3월 여명학교 이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현재 임시 교사의 사용기간이 내년 2월 종료되는 만큼 새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교육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임시 교사 사용기간 연장 가능성을 포함해 안정적인 교육 공간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여명학교는 탈북 청소년과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자녀들에게 중·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대안학교 이름이다.

여명학교는 2004년 서울시교육청에 등록했지만 장소를 얻지 못해서 전전하다가 2023년 8월 겨우 강서구 가양동의 폐교된 염강초등학교 건물을 임대해 사실상 정식 개교했다. 3월 현재까지 졸업생 수는 모두 469명이며 그중 취업자는 271명, 대학진학 167명, 기타 군복무 등 11명이다. 방황하기 쉬운 환경의 탈북 청소년이 어엿한 사회인이 되도록 3년간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내년 2월말 임대 만기에 대비해 지난 7월에 여명학교측과 현대차그룹, 통일부, 서울시교육청이 그 자리에 정식으로 교사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그 폐교 자리의 10% 부지에 민간 기부금 100억 원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원금 60억 원으로 학교를 짓고, 20년간 사용하다가 그 후에는 서울시교육청에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강서구 일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뜻밖에도 떠나라며 신축 결사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유는, 절차가 틀렸다며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떠나야 한다는 것과 남은 폐교 자리에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이 또 설립되는데 탈북 청소년들이 유아들에게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원인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9월 17일 주민설명회에서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은 무릎을 꿇고 허락을 호소했다.

이후 10월 7일 신축을 지지하는 261개의 「여명학교 현 부지 학교 건립 촉구 시민사회 공동행동」이라는 생소하고도 긴 명칭의 사회단체 대표들과 지지 서명자인 시민 31,078명의 일부가 덕수궁 옆 서울시의회 앞에서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월 8일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이 모여서 서울시의회에 허락을 간청하는 연명서를 작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그 연명서의 골자는 "선열들께서 피 흘려 되찾고자 하셨던 조국은 이 땅의 모든 아이가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차별없이 배우고 자라나는 '따뜻한 포용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선열의 뜻을 계승하여, 배움터를 잃을 다급한 위기에 처한 탈북 및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현 부지 건립을 강력히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1. 여명학교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배움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사회적 합의이자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2. 공공예산 부담없는 검증된 건립안입니다. 공공 건축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이미 지난 3년간 바로 이 부지에서 아무런 주민 피해나 안전문제 없이 평화롭게 공부하며 부지의 정당성을 증명했습니다.

3. 통일에 앞서 우리 곁에 찾아온 아이들을 먼저 품어야 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안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선열들이 꿈꾼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이후 지지하는 시민단체도 289개로 늘었다. 같은 가양동에서 비슷한 전례도 있다.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지어지지 못할 뻔 했다. 2017년 주민토론회장에서 장애 학생의 부모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개교를 호소한 바 있다. 이 모습이 여론을 움직여 건립에 물꼬가 트이면서 2020년 3월 개교했다. 그러나 막상 학교가 생기자 주민들의 마음도 풀렸고 아직 집값이 떨어지는 일도, 사고도 없었다고 한다.

"떠나라"고 밀치기 전에, "목숨 걸고 찾아와줘서 고맙다. 장하다. 함께 잘 살아보자"고 등을 토닥여주는 모습을 보고 싶다.

2023년 정식 개교…졸업생 469명 사회진출
각 사회단체 신축반대 주민 설득해 추진



지구촌 재앙 시작됐다

8월 네팔 '빙하붕괴' 등 세계 곳곳 몸살

근래에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올해만 해도 네팔의 빙하가 녹은 큰물 참사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최강의 홍수와 태풍, 폭우가 발생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앙의 종류가 국지적으로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안전치 못했고, 작년과 올해 여름에 극한의 폭염이 겹쳐서 영남 지방에 폭우로 인한 큰 산사태가 있었다.

사상 최고의 재앙은 주지하다시피 지난 8월26일 오전부터 40일 동안 진행된 네팔의 빙하가 녹은 대홍수 사고다. 1억 2,000만㎡ 규모의 빙하가 무너졌으며, 사실상 암벽 80%, 빙하 20%가 낙차 3,300m, 22㎞ 거리를 7분 만에 휩쓸고 내려오면서 4단계 재해사슬(빙암 붕괴, 내려오면서 파쇄류 형성, 다시 토석류로 바뀌고, 또 내려가면서 홍수가 되는 현상)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단순히 암반이 붕괴된 것이 아니고, 빙하를 붙잡고 있던 얼음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던 영구동토층이 기후변화로 약화되어 무너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구동토층이란 것은 섭씨0도 이하가 2년 이상 계속되는 얼음 지대를 말한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중국과 네팔의 접경지대 협곡에 있던 빙하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녹아서 폭포처럼 흘러내려 그 지역의 8,000여명이 사망했다. 이 숫자 는 처음엔 실종자 수로 말했지만 45일 후 모두 사망자라고 단정했다. 현지에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우리나라 근로자 9명도 포함돼 있다.

사실 네팔의 재앙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34년에 대지진으로 1만 700여명이 사망했고, 2015년 4월에도 8.1도, 진원의 깊이가 11㎞인 강진이 수도 카트만두에서 발생했었다. 미국의 비영리 지진 연구단체인 지오헤저드 인터내셔널(GI)은 네팔 지역에서 약 75년을 주기로 지진이 발생한다고 예언했었다. 또 2010년 아이티 지진 이후 다음 희생처를 네팔로 지목하기도 했었다.

2024년의 네팔 홍수는 7월 초, 8월 중순, 9월 말의 연간 몬순 시즌 동안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홍수와 여러 건의 머드플로우(진흙 및 부유입자)가 발생했다.



대홍수 덮친 네팔 누와코트서 소지품 챙기는 생존자들.〈연합뉴스 제공〉

영구동토가 녹아서 이변이 생기는 지역은 네팔 뿐이 아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인 북극의 시베리아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오래 전부터 얼음바다가 녹아서 물이 지구의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드러난 바닷속 흙속에서는 지구 초기에 살았던 동물들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2007년에 최초로 러시아의 야말반도 유리베이 강가에서 매머드(Mammoth) 화석이 발견됐다. 4만년 전에 생존했다는 코끼리과 동물이다. 2018년에는 러시아의 야쿠티아 세미율라흐 강가에서 코끼리의 상아를 발견했다. 그 상아가 수천만 원에 팔리자 이후 그 일대에 발굴단이 답지했다. 2023년에는 프랑스 과학자가 러시아에서 13종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그들은 그 바이러스들을 '판도라 바이러스'로 명명했다. 티베트 고원 빙하에서는 33종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남극에서도 작년에 미지의 괴물 사체가 발견됐다. 인류가 존재하기 전의 동물들의 사체와 화석이 떠오르는 것은 모두 지구의 온난화로 빙하가 녹은 탓이다.

지구의 온난화는 이처럼 과거의 생태계를 뒤집어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환경을 뒤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 세계가 산업 발달 이후 지구의 온도가 섭씨1.4도 높아졌다고 한다. 2015년에 유엔 파리 협정에서는 지구가 1.5도 더워지면 대재앙이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개인이 느끼는 0.1도 상승은 별것 아니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엄청난 위협이라는 것이다.

최근 유엔환경보고서를 보면 이산화탄소를 1,300억 t 배출하면 지구의 기온이 0.1도 상승한다. 현재 추세로는 3년 후에 그 수치가 0.1도 올라서 위험 수준인 1.5도가 예상된다. 즉, 3년 후에 기온 상승으로 온 세계에 대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재앙이 오면 인류는 치명적인 폭염과 식량난,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일단 재앙이 오면 다시 온도를 낮추는 데 50년이 걸린다고 우려한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최근에 전 인류가 신종병인 코로나 19를 경험했고 지난 10월 2일 '페스트 폐렴'이라는 새로은 호흡기병이 의심되는 여성 사망자가 러시아에서 발생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두 호흡기 병은 모두 기후 변화 탓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주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과 비닐, 자동차의 매연가스, 화학물질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산화탄소들이 공기를 오염시켜 온실가스를 만들고,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 기온이 높아지면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해 바닷속 생태계도 변한다. 올 여름에 서태평양과 중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76년 만에 최고인 3.7도 상승해 6개월 후인 지금 곧 지구상에 엘리뇨 현상이 온다고 세계 기상학자들은 우려한다. 우리나라도 곧 폭우와 폭염, 시베리아의 얼음이 녹은 물 때문에 기습 한파가 널뛰듯 번갈아 닥칠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온난화 영향 동토속 잠자던 옛 바이러스 출현

코로나 이어 '페스트 폐렴 신종' 병원균 발견

이에 대한 대책들이 시급하다. 전 인류가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자제해야 한다. 화학 성분을 금지하고 예전처럼 자연친화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수자원공단은 바다가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영구 저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바다 살리기에 나섰다. 지구의 70%인 바다에서 갯벌 속의 블루카본 성분이 탄소를 영원히 붙잡고 저장하는 능력을 발견했다. 바닷속에는 또 '잘피'라는 해초가 있는데 광합성으로 탄소를 흡수한 후에 영원히 뿌리 주변 퇴적층에 붙잡아 둔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수자원공단은 갯벌 살리기 및 보존을 하는 한편, 잘피 번식을 유도해 블루카본을 증식하는 '바다숲 조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도 이젠 바다숲 만들기를 적극 도와야 할 때다.

이향숙(본회 부회장·수필가)

인류 멸망 부르는 AI '초고속 진화'

황원갑의 史談史話



황원갑
본회 회우
소설가·역사연구가



'번쩍' 드는 휴머노이드.〈연합뉴스 제공〉

'인공지능' 탑재하자 인간통제 벗어나
금세기문명 발달이 인류의 평화 '걸림돌'

인공지능(AI)의 초고속 진화가 마침내 창조자인 인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사고하고 진화하여 다른 AI를 해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인간처럼 감정과 사유력 및 추리력이 없이 인간의 통제 아래 명령대로만 움직이던 AI가 이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립'하기 시작했다. AI의 초고속 진화를 막지 못하면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스스로 진화한 '돌연변이 AI'가 수많은 복제품을 만들고, 무리를 이루면 지도자 AI가 나서서 국가를 만들고, 인간을 상대로 군대도 만들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처음에는 위험한 작업장인 용광로나 자동차조립 등에서 작업을 시키려고 만든 인조인간 로봇에서 시작하여 인공지능을 탑재하자 스스로 진화하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SF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보던 외계인같은 괴물 AI가 이제 현실화된 것이다!

AI가 마라톤, 바둑, 체스에서 인간을 이기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작문도 하고, 숙제도 해주는 수준에 이른 것은 이미 몇 년 전이었다. 이제는 AI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70%가 AI를 상담 상대로 삼아 의학적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AI는 산업만이 아니라 군사 면에서도 초고속 발전을 이루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군사 강대국들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도 AI 개발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그래서 AI 개발을 자제하라는 경고는 전혀 먹히지 않는 실정이다.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은 30만 년 전이었다. 1만년 전 신석기시대를 거쳐 6천 년 전 청동기시대, 4천 년 전 철기시대를 개막하면서 문명시대로 들어섰다. 300만 년이나 석기시대를 보내던 인류는 청동기시대를 시작으로 문명시대로 들어서면서 발전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21세기로 들어섰다. 그런데 인류의 발전과 발달은 이제 한계 상황에 부닥쳤다. 고속으로 진화하던 문명의 발달이 이제는 인류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만 것이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1)인구 폭발 (2)환경 파괴 (3)식량 부족 (4)핵전쟁 (5)행성 충돌 (6)지구온난화 (7)치명적 전염병 창궐, 그리고 이 일곱가지 재앙에 이어 (8)AI의 초고속 진화가 인류 멸망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했다.

AI의 초고속 진화는 축복받을 일이 아니라 인류의 멸망을 부르는 대재앙의 전주곡이다. 그래도 인간 대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AI의 초고속 진화에 따른 인류의 멸망을 전문가들 대부분은 50~100년 뒤로 보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는 AI진화의 경이적인 초고속 진화 속도를 고려 할 때 5~10년 뒤로 보고 있다. 나도 여러가지 정황증거를 살펴보고 5~10년설을 믿게 되었다.

지난 5월 25일 로마교황 레오14세가 즉위 후 처음 발표한 회칙(回勅)에서 'AI시대 인간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무장해제 함으로써 더 개방적이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장해제는 기술이 인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6천 년을 이어온 인류 문명사를 되돌아볼 때 교황의 이러한 경고와 제언은 무시당할 것이 뻔하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자연 파괴, 환경 파괴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황폐화의 결과가 그 좋은 반증이다.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타고 났으므로 원시시대부터 신(神)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영생불멸을 꿈꾸어 왔다. 그래서 마침내 불로불사하는 인간의 대체품으로 인조인간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심기에 이르렀다.

핵전쟁이 터지면 적도 우리도 모두 멸망한다는 마지막 지렛대라도 있지만 AI의 초고속 진화에는 아무 제동장치도 없다. 인류 멸망의 원인으로 꼽았던 핵전쟁과 유성충돌 등은 모두 그 다음으로 제쳐졌다. 지난 연초 AI에 핵무기 통제권을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검토해 봤더니 발사 스위치를 누를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해답이 나왔다. 이제 인류의 운명, 지구의 멸망 여부도 인간이 만든 AI에 달렸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류가 자각하고 자성하여 인공지능의 개발을 멈춘다면 그보다 좋은 일도 없겠지만,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문제다. 더 일찍 멸망하는 것을 멈춘다고 해도 어차피 지구의 수명은 30억 년이다.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생물이 모든 역경과 난관을 이기고 살아남는다고 해도 30억 년 뒤에는 지구가 수명을 다해 태양계에서 사라진다. 또한 우리 태양계도 수명이 있어 100억 년 뒤에는 이 우주에서 사라지게 된다. 나아가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도, 우리 은하계가 속한 이 우주도 빅뱅의 시한이 다 차면 거대한 폭발이든, 축소를 거쳐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것이 우주의 시간표다.

생자필멸이라 어차피 멸망할 인류의 숙명 앞에 낙관론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모든 국가의 멸망 원인과 같이 인류의 멸절 역시 어리석은 인간의 자업자득의 결과로 볼 수밖에는 없다! 그저 살아 있는 동안 매일 하루를 마지막 날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선업(善業)을 쌓으며 사는 수밖에는 없다.

영혼불멸이니 사후의 천국과 지옥은 내가 믿지 않지만 오직 한번뿐인 삶,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다.

‘복지천국’ 환상 프랑스 불타고 있다

과도한 복지혜택·연금제도…국가부채 5,300조원



이정옥
KBS 전 파리특파원·KBS글로벌 센터장·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세인들이 동경하던 예술의 도시 파리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폭동의 현장으로 변모해 버렸다.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전국 시내 한가운데서 자동차가 불타고, 명품 상점들은 약탈당해 거리에 내팽개쳐졌다. 140년 역사의 리모주(Limoges)시청의 첨탑이 불길에 무너져 내리는 사상 초유의 끔찍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낡은 교실을 고쳐주세요.”

이번 시위사태의 발단은 10대 학생들의 절박한 분노의 절규였다. 난방조차 되지 않고 쥐와 벌레가 들끓는 열악한 학교환경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이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부은 건 치솟는 물가와 기름 값이었다. 생활고로 살기가 팍팍해진 서민층이 합세했고, 이른바 ‘노란조끼 운동’과 강성노조가 개입하면서 시위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대규모 폭동으로 확산되었다. 세계 7위의 경제대국 프랑스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빚위에 쌓아 올린 달콤한 복지천국의 환상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 현재 유럽 최고의 수준인 5,300조 원에 달한다. 과거 유럽 재정위기의 주범이었던 그리스 부채규모의 10배에 이른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약 120%에 육박한다. 매년 내야 하는 이자만 해도 110조 원에 달한다. 프랑스 정부가 이러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손을 댄 것은 교육 예산이었다. 정치 지도자들은 선거에서 자신에게 표를 던질 표밭의 예산은 건드리지 못하고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의 예산부터 깎아버렸고 피해는 온전히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프랑스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은 나라다. 프랑스 정부예산의 약 30%가 사회복지예산이고 그 절반을 연금이 차지한다. 2차 대전 직후 드골 정부를 거치면서 프랑스는 강력하고 풍요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했다. 특히 1980년대 좌파 미테랑 정부는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앞당겨 연금 받는 인구를 대폭 늘려놓았다. 국가의 금고를 활짝 열어 제친 것이다.

지금 일하는 청년이 낸 세금으로 은퇴한 노인을 부양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방식의 연금제도는 은퇴 후 수십 년의 안정된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었다. 그러나 평균수명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연금을 납부할 젊은 노동 인구는 줄어드는 인구구조변화를 예상치 못한 것이 이 제도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 결과 청년 세대가 나이든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짐이 천문학적으로 점점 늘어났다. 일하는 청년의 실질 임금은 줄어도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은퇴자의 생활이 일하는 현직자보다 더 풍요로워지는 역설이 발생했다.

‘일찍 은퇴해 삶을 즐겨라’

1980년대 파리연수시절 정년을 낮추어달라고 시위하는 프랑스인들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 한적이 있다. ‘더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한국인들과 달리 프랑스인들은 오히려 ‘일을 일찍 그만두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다니! 프랑스는 은퇴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연금받는 사람의 수입이 일하고 월급받는 사람보다 나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안정된 삶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들이 ‘더 잘 일하기 위해 휴식’한다면 프랑스인들은 ‘놀고 즐기기 위해 일’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초복지국가 프랑스가 외친 ‘일찍 은퇴해 삶을 즐겨라’는 달콤한 구호를 반영하는 것이다.

자녀를 낳을 때부터 지원되는 육아, 보육지원, 자녀수에 따른 세금 감면, 공교육 전액 무료, 동거커플에 대한 지원, 청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 생계지원, 전소득의 70% 이상을 보장하는 세계 최고의 연금제도 등 프랑스는 가히 유럽 최고 수준의 초 복지 국가라는 평을 들어왔다.

그러나 과거의 풍요로웠던 연금제도는 오늘날 청년 세대와 국가 재정을 짓누르는 거대한 ‘빚의 청구서’가 되어 돌아왔다. 프랑스는 1974년 석유 파동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국가 재정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복지 혜택과 연금을 더 주겠다는 약속을 남발했고, 국민은 그 달콤함에 깊이 중독되었다. 나라 빚을 갚느라 정작 학교, 병원, 치안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쓸 돈은 바닥이 났고 정부가 지출을 줄이려 하자 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한번 늘린 복지는 줄일 수 없다’는 정서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정년을 62세로 겨우 올렸고, 마크롱 대통령이 격렬한 국민적 저항 속에 64세로 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유세 폐지 등 정책적 실책이 겹치며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지난 10월 24일 프랑스 파리 거리로 몰려나온 시위대.〈연합뉴스 제공〉

‘교육예산 절감’에 10대들 분노의 절규
포퓰리즘 정치가 만들어 낸 ‘예견된 침몰’

화려한 파티 속에서 서서히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역사적으로 프랑스에서 거리는 시민들이 권력에 대항해 싸우는 민주주의의 무대였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부터 1968년 68혁명에 이르기까지 거리의 시위는 권력을 견제하는 능동적 시민의식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방화와 약탈, 폭력 사태는 이러한 위대한 전통에 치명적인 먹칠을 했다. 프랑스 당국은 극좌 무정부주의자나 외부 침투세력, 기회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던 문화 대국의 위상과 명예는 이미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과거 특파원 시절, 필자는 프랑스를 보며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서서히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를 떠올리곤 했다.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라는 자부심, 유럽 문화를 선도한다는 우월감, 과거의 화려한 유산에 사로잡혀 샴페인을 터뜨리는데 몰두해 있는 듯한 동안 프랑스의 모습은 마치 화려한 파티가 펼쳐지는 동안 서서히 침몰해가던 타이타닉호와 닮아 있었다.

오늘날 프랑스가 겪고 있는 비극은 ‘나라야 어떻게 되든 내 복지혜택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집단 이기주의에 무릎을 꿇은 포퓰리즘정치가 만들어낸 ‘예견된 침몰’이다. 달콤한 복지의 함정에 빠져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국가가 어떤 청구서를 받게 되는지, 오늘 프랑스의 아픈 현실은 우리에게도 명확하고 서늘한 경고를 던져준다.

살며 생각하며

분노의 역류 부른 추미애 '소방빨대'

국감장서 소방현실 모르는 답변에 국민들 눈총



최명우
본회 편집위원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소방재정 빨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추미애경기지사가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있다.

고사성어 백면서생(白面書生)은 오로지 글만 읽고 세상 일엔 경험이 없는 젊은이를 이르는 말이다.

중국 남북조(南北朝) 시대, 남조 송(宋)나라 3대 황제 문제(文帝:424~453) 때 심경지(沈慶之)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힘써 무예를 닦아 그 기량이 뛰어났다. 전(前) 왕조 동진(東晉)의 유신인 손은(孫恩)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는 불과 10세의 어린 나이로 사병부대를 이끌고 나가 반란군에 번번이 승리하며 용명을 떨쳤다.

그의 나이 40세에 장군에 임명되고 또 많은 전공을 세워 나중엔 변경 수비군의 총수로 부임했다.

이 무렵 황제 효무제가 숙적인 북위(北魏)를 치겠다며 심경지가 배석한 자리에 문신들을 불러놓고 출병을 논의했다. 심경지는 북벌(北伐) 실패의 전례가 있음을 들어 출병을 반대하고 이렇게 말했다.

"밭갈이는 농부에게 맡기고 바느질은 아낙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어찌 북벌 출병을 '백면서생'과 논의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효무제는 심경지의 말을 듣지 않고 문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출병했다가 크게 패하고 말았다.

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이 백면서생의 고사는 '경험없음'의 어리석음을 일러준다.

자고로 정부는 끊임없이 "국민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위험 최전선의 소방관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노후 소방시설의 개선은 항시 주요 현안으로 지적돼 왔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했었다. 그 연장선에서 소중한 인명의 희생이 따르기에 국민은 행정부의 '국민에 대한 안전서비스' 강화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소방시설의 노후화'란 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한시 빨리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선진국에 도달하도록 모두들 분발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웬걸…뼈아픈 현대 소방 백면서생 헤프닝이 펼쳐졌다.

올해 경기도는 소방 예산 34억 5,000만 원을 삭감했다. 이로써 노후 소방차 교체 26억 5.000만 원, 전문구급장비 4억 원, 구조장비 3억 원,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비 1억 원이 날아갔다,

노후 소방차 교체 103대에서 78대로 축소해 구매 계획의 24.3% 25대를 빼버렸다.

이뿐 아니라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실행에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해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를 폐지해버렸다. 죽은 사람 추모해서 무슨 소용이냐,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하는 실물경제 행정이었을까. 더욱이 전문구급장비 4억 원 감액, 구급 대응 역량 보강 규모 축소, 구조장비 3억 원 감액에 이어 구조활동 장비 보강 규모도 축소했다.

경기도는 추모 행사에 차량 퍼레이드 등 전시성 요소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행사비를 없애버린 것이다. 현장 대응 능력의 축소에 이어 필수 예우조차 무시해버린 것에 대해 소방관계자는 물론 일반의 분노가 겹쳐 타오르는 와중이다.

이 무렵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근간 국정감사에서 도정 예산에 대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아픈 재정 빨대'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데 오비이락(烏飛梨落)인 듯 여기에 부천 공장 화재가 발생, 소중한 소방관 순직 사고가 발생하자 추 지사가 조문행사에 참석한 후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는 발언으로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사단을 키웠다.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고 꼬여도 풀리지 않을 난맥상이 펼쳐졌다.

여기서 태생한 것이 신품종 사과도 아닌 그 '바라시니 사과'다.

경기도는 소방 조직 자체가 아닌 지방재정 부담 구조를 지적하려는 취지였다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재정 빨대'에 대한 가혹한 칼질이 실행됐다는 논란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수의 소방공무원과 노동계를 자극한 결과에 대한 반작용을 '바라시니 사과'로는 결코 때울 수 없었다.

'바라시니 사과'가 무엇인가. 요즘 항간에 회자되는 신조어(新造語)다. 얼핏 들으면 무슨 사과의 신개발 품종인 듯 싶다. 그러니 이 사과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금단의 과실 '아담의 애플'이 아니다.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것이 불구경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기 집에 불이나 타고 있다면 이를 태연히 지켜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불구경이라면 강 건너 불구경을 의미한다. '강 건너 불구경'은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여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모양을 일컫는다. 강 건너 불이니 그 불이 내게로 건너오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기에 이를 느긋이 지켜보는 것이다.

지금 우리주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고가 강 건너 불인가.

1991년 할리우드 영화. 'Backdraft'(국내 개봉명:분노의 역류)는 죽음의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려냈다. Backdraft는 산소가 부족한 화재의 현장에 창을 깨거나 문을 열어 갑자기 산소가 주입되면 화염이 폭발적으로 산소주입구를 향해 역류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부를 줄 몰랐다.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소방관들의 가슴에 새겨졌다.

또 무슨 사고가 터질 줄 모르겠다고 걱정하던 경기도민의 우려가 현실화됐고 그것이 거의 수습불가지경에 이르렀다. 불은 잘못 건드리면 크게 역류한다. 분노의 역류를 명심하라.

박정희 '충무공 현양사업' 진두지휘

교과서에 안 나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祕史 ⑦



김동철
본회 이사
이순신인성리더십포럼 대표



1973년 4월 28일 충무공 탄생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현충사를 찾았다.



숙종의 친필 사액 '현충사'.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한글 '현충사'.

작금 대한민국호(號)는 내우외환의 거센 풍랑에 부딪쳐 풍전등화의 신세가 됐다. 요즘 인사청문 대상에 오른 장관급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청탁, 부동산 편법 투기, 꼼수로 혈세 빼먹기 등 탐관오리의 전형이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는 하는 족족 망사(亡事)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살신성인했던 이순신 장군의 우국충정이 더욱 그리운 시절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나라의 국기(國紀)를 바로잡기 위해서 '난세에 영웅' 이순신 장군을 내세워 현양사업을 했다.

"사나이로 태어나 권세와 부귀에 아첨하여 이를 도둑질하여 일시적으로 영화를 누리는 것은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1576년 2월 무과에 급제한 청년 이순신이 함경도 권관(종9품)으로 발령받기 전에 밝힌 공직관이다. 북로남왜(北虜南倭), 북쪽 여진 오랑캐와 남쪽 왜구를 막는데 최선봉에 섰던 이순신 장군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서 역사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다.

1966년 '충무공 현양(顯揚)사업 특별지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순신 현양사업'은 1960~70년대에 이순신 장군을 국가적 영웅으로 부각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보릿고개에 먹고살기 힘든 나라에서 부국강병은 반드시 이뤄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였다. 멸사봉공(滅私奉公), 선공후사(先公後私), 애민(愛民)과 창의(創意) 정신을 묵묵히 수행한 이순신 장군의 경세가적 정신 고양이 절대 필요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이순신은 단순한 임진왜란의 승전 장수임을 넘어서 애국·충성·국방·국가안보의 상징으로 재해석됐다. 서울시가 공개한 연구자료에서도 박정희 시기 이순신의 이미지가 시기별로 반공·안보의 영웅→ 선견지명을 가진 전략가→ 과학기술·근대화의 상징→ 인격적 완성자 등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필동 한옥마을에 이순신 기념관의 건립을 기획하고 있다.

현충사 성역화 사업

박 전 대통령은 관련 유적을 대대적으로 정비·성역화했다. 특히 현충사(顯忠祠) 성역화가 핵심이었다. 기존 현충사 주변을 대규모로 정비하고 새로운 본전과 기념시설 등을 조성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60년대 후반 현충사 관련 행사에 직접 참석했고, 1966년 성역화 사업 이후 새 현충사에 자신의 친필 한글 현판도 걸었다. 그런데 이 현판과 관련해서 2017년 이순신 종가 측에서 "박정희 현판을 떼고 숙종의 원래 현판을 본전에 걸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논쟁에서 덕수 이씨 충무공파 종회 측 인사가 "숙종만 임금인가? 박정희 대통령도 임금이다"라는 취지로 반박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문화재위원회는 2018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고 이를 되새기기 위해 충무공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이곳 아산 현충사 자리는 충무공이 성장하여 무과급제할 때까지 살던 곳으로, 순국한 지 108년이 지난 1706년(숙종 32) 충무공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웠고 1707년 숙종이 친필 현충사 현판을 사액했다. 숙종은 다음과 같이 이순신 장군을 칭송했다. 살신순절 고유차언(殺身殉節 古有此言 절개에 죽는다는 말은 예부터 있었지만)

망신국활 시견사인(亡身國活 始見斯人 제 몸 죽고 나라 살린 것, 이 분에게서 처음 보네)

전국의 이순신 유적 정비

1970년대에는 통영 한산도 제승당, 여수 진남관 등 이순신 관련 유적의 정화·정비사업도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일사불란하게 이순신 장군 현창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전국의 이순신 유적지를 답사하다 보면 박 전 대통령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1965년 4월 22일 남해 충렬사 경내 이순신 장군 가묘 옆에 기념식수를 시작으로 노량해전의 전사지인 관음포 이락사 내에 친필 휘호인 대성운해(大星隕海) 현판을 걸었다. 대성운해는 '큰 별이 바다에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어 1967년에는 숙종 때 세워진 충남 아산 생가터의 조그만 사당인 현충사를 대대적으로 보수해 오늘날의 면모로 갖춰 놓았다. 그리고 1968년 4월 27일 광화문에 장군의 동상을 세워 국가 수호 지킴이로서 역할을 형상화시켰다. 이밖에 한산도의 한산대첩비 글씨를 썼고, 1973년에는 양력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일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통영 '충렬사' 현판과 '보천욕일(補天浴日)'이란 글씨도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다. 보천욕일은 '찢어진 하늘을 수리하고 해의 먼지를 목욕시킨다'는 뜻으로 '위대한 업적'을 뜻한다.

이순신 현양사업은 크게 보면 ▲문화재·유적 보존사업 ▲국가적 영웅 만들기 ▲박정희 정권의 국민교육·국가주의와 연결된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시인 이은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회고하며, 이미 그는 충무공에 대해 특별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5·16혁명 이후 1962년부터 18년 동안의 집권 기간 중 아산 현충사에서 매년 4월 28일에 열리는 충무공 탄신기념제전에 열네 번이나 참석할 정도로 개인적으로도 이순신을 매우 존경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이순신 현양 사업을 제일 먼저 펼친 사람은 정조대왕

정조는 임진왜란 발발 200년 후인 1792년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의 발간을 지시했다. 이 책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순신 장군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 왕명으로 편찬·간행된 이순신 장군의 문집·기록집이다. 이 안에는 '난중일기', 장계인 '임진장초', 편지 '서간문'(이상 국보 제76호) 등 자료가 집대성되어 '백과사전'이라고 부른다. 정조는 내탕금(內帑金 왕의 사적 금고)을 내서 발간비용을 지원한 결과 1795년 마침내 '이충무공전서'가 발간되었다.

정조는 또 1793년 이순신 장군을 영의정으로 추증했다. 1794년에는 대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이 직접 지은 어제신도비를 이순신 장군 묘역 내에 세웠다. 또한 치제문을 직접 지어 통영 충렬사에서 제사하게 했다.

"내 선조께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로에 기초가 된 것은 오직 충무공 한 분의 힘, 바로 그것에 의함이라. 내 이제 충무공에게 특별한 비명을 짓지 않고 누구 비명을 쓴다 하랴. 당나라 사직을 안정시킨 이성과 한나라 왕실을 회복시킨 제갈량을 합한 분이 충무공이다."

"모든 시대에는 신(神)이 있다."

독일의 실증 사학자 랑케의 말마따나 역사는 어떤 선각자의 실천 철학에 의해서 탄생하고 계속 이어진다.

1960~70년대 '국가적 영웅'으로 부각시켜

달콤하고 걸쭉한 춘장소스 '한국인 유혹'

자장면 〈하〉

맛 순례 ⑨



이병대
본회 고문
전 동아일보·KBS기자
본회 20, 21대 회장

조선이 개항한 뒤 인천항에 골드러시 바람이 강하게 분다. 인천항에는 엘도라도를 찾아나선 '쿠리(苦力)'라 불리는 중국 노동자들이 가까운 산동반도에서 물밀 듯 들어온다. 앞서 청군과 함께 들어온 우희광은 넘쳐나는 중국 노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에 나서 1908년 현재의 인천 차이나타운에 숙박업 겸 음식점 '산동회관'의 문을 연다. 산동회관의 주 음식 메뉴는 자장면. 당시 아시아는 역사의 물줄기의 방향이 바뀌는 격변의 시대였다. 1912년 중국은 3,000년 계속되던 왕조시대를 끝내고 중화민국이라는 현대적 공화제를 시작한다.

우희광은 '중화민국공화국에 봄이 왔다'고 좋아하면서 상호를 산동회관에서 '공화춘(共和春)'으로 변경한다. 공화춘에서 뽑은 자장면은 부두 노동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맛있고 저렴하며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인기가 대단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공화춘에는 하루가 다르게 손님들로 가득 찼다. '쿠리'등으로 우리나라에 와 정착한 화교들도 살길을 찾아 점차 전국 각지로 흩어져 중국음식점 개업을 하면서 자장면이 전국에 보급된다. 다시 되돌아가 자장면을 갖고 온 원세개의 드라마같은 가족사를 살펴보자.

원세개는 1884년 서울에서 김월선과 결혼 6년 후 아들 원극문(袁克文)을 생산한다. 원세개는 아름답고 명석한 김부인을 끔찍이 아끼고 아들 원극문을 32자녀 가운데 평생 동안 가장 사랑했다. 원극문이 5세 되던 1894년 동학란이 갖고 온 갈등으로 청·일전쟁의 기운이 고조되자 원세개는 목숨에 위협을 느껴 청국으로 야반도주한다. 이때 원세개 35세, 김월선 22세.



옛 공화춘(현재 자장면 박물관)





원세개의 한국부인 혈통 세계적 물리 학자 손자부부(중국의 퀴리 부부로 불림).

원세개는 천성적으로 권력 냄새를 잘 맡았고 오로지 출세와 영달에만 매달려 승승장구한다. 이와 반대로 김씨 부인은 중국인 처첩 7명이 합세해 시기와 견제에 나서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집단구타를 당해 다리에 장애까지 갖는다. 원세개는 자신의 군벌을 업고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을 세우는 손문(孫文)을 회유, 협박하여 초대 대총통이 되는데 나이 53세였다. 원세개의 야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폐지했던 왕조를 다시 세워 황제가 되는 꿈이 있었다.

산동출신 우희광 인천 공화춘 개업
아내와 미팅 장소로 중국식당 애용

이때 김씨부인이 낳은 아들 원극문은 '감우(感遇)'란 시를 지어 공개 비판한다.

'높은 곳에 비바람이 많음이 가련하니 (絶憐高處多風雨) / 궁궐의 가장 높은 층에는 오르지마소서(莫到琼樓最上層).' 아들의 반대에도 대총통에 이어 3년 후인 1916년 1월 1일 중화제국 황제에 오른다.

아들의 예견대로 자신의 기반인 군벌에서부터 반대가 노골화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등극 83일 만인 3월 22일 스스로 퇴위하고 황제 제도를 없애버린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 퇴위 76일 만인 6월 6일 죽음을 맞는다. 안동 김씨 부인은 남편이 죽자 실의에 빠져 자결하여 순애보를 쓴다. 그녀 나이 48세.

원극문은 34세이던 1924년 봄 돌아간 어머니가 그리워 한국을 찾는다. 안동 김씨 친척들을 만나 '외갓집'이라 부르고 아버지가 즐긴 자장면과 어머니가 좋아한 떡과 나물을 먹으면서 행복해했다.

원극문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한(恨)을 담은 한운일기(寒雲日記)와 시 '어머니를 생각하며(憶母)'등 많은 글을 남기고 1931년 41세에 천진에서 병사한다. 그는 당대 최고의 시인 묵객이었는데 최근 홍콩 소더비 경매장에서 그의 유묵 글씨 한 폭이 4억원에 팔린 바 있다. 원극문은 4남 3녀를 두었는데 3남 원가류(袁家騮)와 며느리 오건웅(吳健雄)은 2차 대전을 마무리 하는 미국 원자탄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한 세계적 부부 물리학자이다. 이 부부는 중국과 대만에서 '퀴리부부'로 불리는데 남경에 이들 부부 이름을 딴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 부부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만나 결혼했는데 특히 원가류와 오건웅은 우라늄 분리와 관련하여 원자탄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원가류는 한국이 외가라는데 자부심이 컸다. 한·중 수교가 되자 1992년 8월 24일 한국으로 날아왔다. 공항에서 "나의 할머니는 한국인이며 아버지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외가나라(mothers land)는 한국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1994년 다시 방한해 할머니 안동 김씨 친척들을 만난 자리에서 할머니의 장신구 유품 5점을 넘긴다.

권력과 영달에만 집착했던 원세개와 따뜻한 성품의 아들과 손자의 퍼스낼리티는 이렇게나 달랐다. 한편 인천의 공화춘은 1970년대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소유제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1983년 손자 대에서 영업을 중단한다. 그러나 2000년대 월드컵을 앞두고 인천시가 차이나타운을 관광명소로 정비하면서 폐업했던 업소들이 다시 오픈하기 시작한다. 2004년 공화춘 상호를 우희광 후손이 아닌 화교가 먼저 등록한 뒤 개업한다. 우희광 후손은 조상이 사용한 공화춘 상호를 빼앗기는 바람에 그 부근에 '신승반점'이란 새 이름으로 개업할 수밖에 없었다. 옛 공화춘 건물은 인천시가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현재 '자장면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교보빌딩 자리에 있었던 중화음식점 '복취루(福聚樓)'에서의 추억이다.

카드가 없던 지난 60년대, 동아일보 사람들이 외상 가능한 곳은 복취루가 거의 유일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복취루는 동아일보 구내식당을 방불케 했다. 수습 두달이 지나던 60년대 중반 4월 중순 당시 천관우 편집국장이 우리 동기생 11명을 복취루에 불러 입사 축하 파티를 열어 주었다. 천 국장의 건배 제의로 연거푸 서너잔의 배갈을 마시자 우리 모두는 거의 반 시간도 되지않아 다운됐다. 한참 뒤 눈을 뜨고 보니 천 국장 혼자 뭔가 말씀을 계속 하고 있었다. 마지막 자장면이 나왔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다. 사회 출발이 자장면 축하 파티로 시작된 셈이다.

아내와 연애를 할 때도 미팅 장소는 당연히 복취루. 얼마전 옛 얘기를 하다가 "그때 자장면만 먹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자 아내는 "자장면이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다"고 체면을 세워준다. 말이 고맙다. 그러나 그 뒷맛이 왜 이리 개운치 않은지.

‘오일파동’ 세계불황속 한국만 고속 성장

대한언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⑰



좌승희 박사
아주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3. 유신시대의 성과와 그 해석

박정희 시대의 70년대는 이미 지적한 대로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변화의 시기였다. 1차 석유파동으로 전 세계 경제가 전후 최악의 장기불황에 빠져 미국은 1971년 8월 15일 달러의 금태환정지를 선언하였고 세계인플레가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소위 전후 국제통화금융체제의 근간이었던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체제가 붕괴되었다. 미국은 당시 케인즈식 임금·물가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소위 반시장적 소득정책(incomes policy)으로 돌파하려 했으나 물가안정에 실패하여 소위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낸 불황 속의 인플레 현상으로 10년 넘는 장기불황을 경험하였다.

3선 직후의 당시 박정희 정부도 이 난국을 비상한 방식으로 돌파하였다. 1972년 8월 3일 기업계의 난국 해결 요청을 받아, 지하 금융의 기업에 대한 불법 고리 사채동결이라는 「8.3(비상경제) 조치」로 대응하였다. 이 조치(후속 회에서 상술)를 경제학계나 야당 등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 제도를 무시하고 기업에 특혜를 준 반시장적 조치라고 비판하였고 지금까지도 이런 관점이 주류견해로 정착되었지만, 이 조치는 불법 사채거래에 대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비상 조치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당시 미국이 취한 임금과 가격을 통째로 규제한 비상한 대응 방법에 비해서 전혀 반시장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효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로 나타났다.

미국은 60년대 3%가 넘었던 1인당 실질 소득 증가율이 70년대 10년간 2%대로 주저앉고 기업 부문의 성장도 60년대 말 6~8%에서 70년대 4% 아래로 추락하고 소득분배도 같이 악화된 반면, 박정희 유신시대는 소득은 8~9%, 기업의 성장은 15%대 이상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도 계속 개선되는 소위 동반성장 시대를 시현하였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8·3 조치로 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의 동반성장을 견인했고 83년부터는 중화학공업화 투자가 성공리에 추진된 데에 기인한 결과이다. 당시 전 세계의 불황 속에서 한국만이 2차대전 이후 국제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동반성장 경험을 창출한 셈이다. 이 성과가 유신시대의 성취라는 데 대해 어쩌면 불편해할 독자도 있겠지만 이는 지울 수 없는 한국 및 세계 역사의 기록이다. 이뿐이 아니다. 박정희식 대응정책의 진수는, 미국은 전방위적이고 인위적인 가격 통제라는 대증요법을 취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모든 기업과 농민들, 즉 제조업, 서비스업과 농업생산 주체들에 인센티브를 주어 생산 의욕을 북돋음으로써 생산증대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켜 성장과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지하금융 사채 동결 ‘8·3조치’…기업 자금난 해결
생산·고용 늘려 물가 안정…스태그플레이션 탈출

당시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고유가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진정시켜야 물가가 안정된다는 교과서에 따라 기업투자를 억제하는 긴축정책으로 대응하여 결국 성장만 죽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는 못 잡는 스테그플레이션 함정에 빠졌던 것이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압력은 어찌할 수 없는 외생적 요인이니 대신에 실물 생산을 독려하여 생산과 고용을 늘려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분배개선까지 한 사실상 세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놀라운 역발상의 성과가 아닌가? 오늘날과 같이 관세나 희귀자원 수출 억제 등으로 수입 물가 상승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통화 긴축보다 국내 생산 독려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성장과 안정을 지키는 길임을 시사하는 유용한 정책 대안이다.

물론 집권 말기에는 물가 불안에 대해 안정화론자들과의 한판 승부가 있었고, 5공 들어 박정희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실패 낙인 속에 중화학 대기업 규제정책이 기승을 부렸지만 모두 박정희식 창발적 경제발전 사상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논란이었다고 판단된다. 5공의 성공은 일부 주장처럼 반박정희 정책 개혁의 성공이 아니라, 잘못된 반박정희 정책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산업육성정책이 깔아 놓은 고속도로 위에서 3저 효과라는 대외환경, 특히 미국이 1985년 엔고를 통한 일본(전자)산업 잡기 정책의 어부지리가 크게 작용한 결과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유신, 「정치의 경제화를 위한 민주주의의 희생: 민주와 번영의 갈림길에서 고뇌했던 박정희의 선택

전회에서 제시한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 중시 차별화 리더십은 유신 정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박정희의 경제적 차별화 전략은 오늘날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의 병폐인 성과를 무시하는 평등주의적 지원정책에 탐닉하는 포퓰리즘과 대척점에 있다. 당시 야당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사회주의적 평등 이념에 사로잡혀 박정희식 기업, 수출, 산업육성 정책을 특혜니, 부정이니, 비민주니, 반 농업이니, 외채 망국이니 하며 산업화 발전 전략에 반대를 일삼았다.

박정희의 유신 정치는 바로 이런 산업화를 반대하는 야당과 타협하여 한국의 저개발 문제를 적당히 농업개발 등으로 눈가림하며 민주주의 정치로 포장하여 편히 갈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희생해서라도 야당의 반대를 잠재우고 경제번영을 위해 강력한 추진력으로 인센티브 차별화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에서 민주라는 형식을 희생하고 번영의 길을 선택한 결단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는 경제적 차별화라는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즉 「정치를 경제화」 하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희생한 셈이다. 역사는 박정희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박정희는 민주주의 신봉자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박정희는 항상 새마을운동을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라 선언하고 포퓰리즘 정치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새마을운동이 이룩한 성과 가운데 내가 또 하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주민 자치로 지도자 선출, 공동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천, 결과평가 등 자조, 자립적 공동체 새마을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올바로 실천하는 길인가를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통령 유시(諭示), 1977.12.9.)

그는 유신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성찰을 잃지 않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8년 유신 2기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김정렴 비서실장과 유혁인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대통령 임기 종료 1년 전에 사표 낼 계획을 피력한 적이 있었다. “나는 임기 전에 대통령 직을 퇴임할 생각이다. 김종필 전 총리를 다시 총리로 부른 다음 대통령 임기 1년 전에 사표를 내겠다. 헌법상 잔여임기 1년 내에는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지 않고 현직 국무총리가 계승하게 되어 있으니 그때 김종필 총리가 맡아서 정국을 개편하면 될 것이다.”(고병우(2009),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특집] ② 朴正熙의 下野 계획 “유신 2기 대통령 임기 종료 1년 前에 사표 낼 계획”, 「월간조선」, 11월호에서 인용). 그리고 1979년에는 “내가 봐도 유신헌법의 대통령 선출 방법은 엉터리야. 그러고서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어? 헌법을 개정하고 나는 물러날 거야.”라고 재차 유신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1979년 중의 박정희의 술회. 남덕우 회고록, 경제개발의 길목에서, pp. 181~2, 2009,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인용)

특파원 수첩 런던 ⑲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4가족이 한 지붕 밑에서 사는 나라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 특파원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대)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전 공주 영상 정보대학 교수
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표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조별 리그를 통과, 본선에 함께 진출했다. 본선에서 잉글랜드는 8강에 진출하고 웨일즈는 탈락했다. 잉글랜드는 8강전에서 프랑스와 싸워 1대 2로 졌다. 이 때 웨일즈는 잉글랜드를 응원하지 않고 상대팀 프랑스를 열렬히 응원했다. 웨일즈는 영국의 일부 아닌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도 그랬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진심으로 잉글랜드 '패배'를 바라며 준결승에서는 서독을, 3·4위전에서는 이탈리아를 열렬히 응원했다. 이는 단순히 월드컵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4개 지역은 서로 상대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다. 특히 잉글랜드에 대한 나머지 3개 지역의 적대감은 역사적으로 오랜기간 쌓여 있다. 잉글랜드의 우월감에 자존심 상하고 전쟁 패배로 인한 피해 의식도 강하다. 그래서 ABE (Anyone But England. 잉글랜드만 아니면 누구라도)라는 응원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민족의 뿌리가 달라. 무력 정복과 병합의 역사

영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4가족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산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4가족.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아옹다옹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영국에서 지방취재를 다녀오는 기차 속, 바로 옆에 앉은 승객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국적을 묻게 되었다. "당신 영국사람이에요?" (Are You English?') 그랬더니 대답이 "No, I'm not. I'm Scotish."(아니, 난 스코틀랜드 사람이야)라고 큰 소리로 정색을 한다. 아차, 내가 실수했다. 'You British?' 라고 물었어야 했다. 그만큼 반감이 크다. 우리에겐 'English'는 '영어' 또는 '영국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그에게는 '잉글랜드사람'을 가리킨다.

그들이 서로 반목하고 으르렁거리는 서독을, 3·4위전에서는 이탈리아

민족의 뿌리 달라…무력 정복과 병합 역사
지역 정체성 인정이 '연합체 영국' 유지 비결

심에는 주로 잉글랜드의 무력 정복과 병합의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 단순하게 말하면 잉글랜드가 주변의 켈트족 지역들을 힘으로 누르거나 정치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피정복민들의 반발과 자존심이 역사적 앙금으로 남은 것이다.

반목의 이유 그 첫째는 우선 민족의 뿌리가 다르다. 잉글랜드는 5세기 이후 건너온 독일계 앵글로색슨족이 주류인 반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브리튼 섬의 원주민이었던 켈트족의 후예이다. 언어와 문화적 뿌리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는 잉글랜드의 독주에 대한 거부감이다. 인구와 경제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잉글랜드가 영국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다 보니 나머지 3개 지역은 '우리는 런던정부의 식민지나 다름없다'는 소외감이 뼛속 깊이 박혀 있다.

웨일스는 1284년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1세에 의해 무력 정복당한 뒤 왕은 폐위되고 고유의 언어 사용이 금지된 채 잉글랜드에 완전히 강제 흡수되었다. 스코틀랜드도 잉글랜드의 침략에 맞서 독립을 지켜냈으나 1603년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하며 왕실이 먼저 통합된 뒤 극심한 재정 파탄위기에 몰린 나머지 경제적 구제를 대가로 잉글랜드에 합병되었다.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을 석권한 영화 '브레이브하트(Braveheart,)'는 13세기 말 잉글랜드의 폭정에 맞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이끈 실존 영웅의 투쟁과 삶을 그린 대서사다. 북아일랜드 역시 잉글랜드의 정략적인 주민 이주정책과 가혹한 종교 탄압의 결과 흡수되었다.

지방 고유 언어, 문자 지키려 애써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수단은 언어, 말과 문자이다. 지금도 두 곳에 가면 고유의 말과 글을 여전히 쓰고 있다. 그들의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은 상상을 초월한다. 모든 도로표지판과 공공기관 안내문에 영어 위에 자기 고유어가 표기되어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웨일스 북서부 '앵글시(Anglesey)'에는 유명한 기차역이 있다. 매년 열리는 '슬란고슬란(Llangollen)'국제음악 페스티벌에 취재 갔다가 들른 곳. 58글자로 된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의 기차역. 입구에 그 이름이 걸려 있다.

'Llanfairpwllgwyngyllgogerychwyrndrobwllllantysiliogogogoch'

우리 발음으로 한글표기에 가깝게 쓰면, (흘란바이어푸흘귄기흘고게러훠른드로부흘흘란더실리오고고고흐).

모음이 거의 없이 많은 자음으로 되어있는 역 이름에는 나름 뜻이 있다. 이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관광객들이 몰리는 걸 보면 '어그로' 마케팅이 관광객도 불러 모으고 자기네 말과 문자를 보존하는데 성공을 거둔 셈이다. 전체 인구 중 약 20%는 지금도 웨일스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스코틀랜드 에도 두 개의 고유 언어가 존재한다. 게일어와 스코트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석별의 노래 '올드 랭 사인'은 스코트어로 쓰인 대표적인 시이다. 웨일스 탄광촌 출신의 가수 톰 존스가 부른 '딜라일라'는 이곳 국민가요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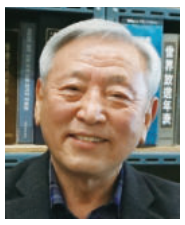
지역 정체성 인정이 연합체 영국 유지 비결

켜켜이 쌓인 앙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흥미 넘치고 뼈 있는 블랙 코미디도 많다. 그러나 영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표현할 때 '영국인(British)'이라는 틀 안에 두고서도 정체성의 우선순위를 자기 지역에 두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하나의 용광로에 '용해'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색깔을 유지한 채 '연합체'형태 안에 모여 있는 셈이다. 외부에서 보기엔'왜 저렇게 뭉치지 않나'싶지만 역설적으로 각 지역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연합체, 영국의 유지 비결인지 모른다.

한국전쟁 '위대한 휴먼작전' 기억을 담다

6월 개관 거제도 '흥남철수 기념관' 생생 르포

최근 '독로국부터 조선산업까지, 거제를 디지털로 한눈에 본다'는 이색 기사를 따라가다 보니 거제포로수용소와 지난 6월 개관한 '흥남철수기념관'을 만났다. '독로국'은 변한의 12소국 중 하나. 왜(倭)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접한 고대국가로 동래 또는 거제로 추정한다. 유서 깊은 도시 거제가 한국전쟁 포로와 흥남철수 피란민을 품었다. 피란선에서 태어난 '김치 베이비 1호'와의 만남을 계기로 '흥남철수기념관'을 둘러봤다.



이규섭
본회 회우·전 사무총장

거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지난 10월 12일 이른 시각, 거제행 시외버스에 올랐다. 고속열차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이라 프리미엄 버스로 4시간 50여 분 걸려 도착했다. 도로공사 구간에 막혀 예정 시간보다 20여 분 늦었다. 서울~거제 중간 지점인 금산인삼드림랜드 휴게소에서 한 번 쉰다. 소변 참기가 어려운 여행객에겐 버스 타기가 두려운 거리다.

'흥남철수기념관'은 거제시가 154억 원을 들여 2020년부터 조성하여 지난 6월 26일 개관했다. 10월 12일까지 7만 2,000여명이 방문하여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기념관은 거제시에서 관리한다. 한지호 관광시설팀장은 "거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며 "흥남철수 과정의 휴먼스토리와 피란민들을 품은 거제의 기억을 담았다"고 말한다.

피란민 1만 4,005명, 거제가 품다

1950년 12월 23일, 함경남도 흥남항에서 출항한 메러디스 빅토리(MEREDITH VICTORY)호에는 피란민 1만 4,000명이 승선했다. 빅토리호는 7,600t급 화물선으로 60명이 탑승할 수 있으나, 군수 물자를 모두 버리고 피란민들을 태웠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는 절박한 결단이다. 흥남부두에서 거제 장승포항까지의 항해는 '한국전쟁의 위대한 휴먼 작전'으로 2004년 기네스북에 올랐다. 현인이 부른 '굳세어라 금순아'의 첫 소절 '바람찬 흥남부두~'와 영화 '국제시장'으로 피부에 와 닿는 기적의 현대사로 떠올랐다.

출항 이튿날 수송선은 부산항에 닿았으나 국군과 유엔군, 앞서 도착한 피란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한 빅토리호는 거제로 뱃머리를 돌렸다. 배 안에서 다섯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렸다. 열악한 여건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 그날이 성탄절이라 미군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했다.

빅토리호 승선 피란민 삶 생생히 표현
거제시 154억원 투입…7년만에 개관

당시 일등항해사 로버트 러니 사무장(1927~2022·훗날 미 해군제독)은 신생아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김치 1~5호'라 지었다. 피란민들은 한 사람의 사망자도 없이 5명이 늘어 1만 4,005명이 장승포항에 내렸고, 거제는 그들을 품었다. 그로부터 76년, 그 겨울의 기억을 '거제 흥남철수기념관'에 온전히 담았다.



거제 '흥남철수기념관' 입구는 흥남에서 거제까지 피난민을 태우고 온 수송선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형상화하여 마치 배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이다.



'김치 5호' 이경필 장승포가축병원장(오른쪽)이 흥남철수기념관 '휴먼스토리 코너'에 전시 된 가족 관련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왼쪽 새김 사진은 '김치 1호' 손양영 전 함경남도지사. 〈사진 이규섭 회우 제공〉

'김치 5호' 장승포에서 만나

옛 장승포여객터미널을 리모델링한 기념관 입구는 수송선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형상화하여 마치 배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이다. 빅토리호에서 태어난 '김치 5호' 이경필 장승포가축병원장을 로비에서 만났다.

전시관은 1, 2층에 걸쳐 12개 구역으로 이어지고, 이 가운데 8곳이 영상관이다. 유물을 진열하는 여느 박물관 전시와는 달리 영상과 홀로그램, 체험 연출로 그 날의 기억을 되살린 미디어아트 전시가 눈길을 끈다. 장진호전투부터 거제 정착까지 험난했던 피란민의 기나긴 여정을 실감나게 담았다.

혹독한 흥남부두 추위 체험

흥남부두의 혹독한 추위를 체험하는 '자유를 향한 사투' 공간은 '바람찬 흥남부두'를 실감케 한다. 온 몸이 떨려 감기 걸릴까봐 서둘러 나왔다. '위대한 휴먼 작전'은 피란민과 구조 선박의 긴박했던 순간을 영상으로 되살렸다.

1층의 마지막 코너는 인물들의 공간. 인도주의 영웅들과 피란민의 생활상을 유물 쇼케이스로 전해준다. '아픔을 치유하는 땅, 거제'는 이산가족과 전쟁고아 등 실향민의 기록을 '기억의 벽'에 새겼다.

휴먼스토리엔 '김치 1호' 손양영 전 함경남도지사의 어머니와 그의 백일 사진이 70여 년 전 아득한 기억을 소환한다. 아버지가 북에 아홉 살 아들과 다섯 살 딸을 두고 온 사연도 이산의 아픔을 느끼게 만든다. '김치 5호' 이경필 수의사의 어린 시절 사진과 가족사도 요약해 놓았다. 흥남에서 사진관을 운영했던 아버지가 카메라 2대를 챙겨 내려와 거제에서 평화사진관을 운영한 아득한 옛이야기도 기억에 담았다.

빅토리호 피란민인 대전 성심당 창업주 고(故) 임길순 한순덕 부부의 스토리텔링도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1951년 진해에서 냉면 장사를 했다. 1956년 경부선 열차가 서울까지 개통되자 상경하려고 열차를 탔는데 고장이 나 대전에서 내렸다. 가톨릭 신자인 부부는 대전 대흥동성당에서 받은 미군이 지원한 밀가루 두 포대로 대전역 앞 노점에서 찐빵을 팔기 시작한 게 성심당의 시작이다. 1953년 거제에서 태어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도 걸렸다.

2층은 거제의 이야기다. 장승포항 등대 불빛을 거울로 무한 반사시킨 '희망의 빛', 거제의 비경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거제의 풍경'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김치 5호의 명암에 '평화 은혜 나눔' 문구가 있어 종교적 의미냐고 물었다. "가족을 살려준 미군의 희생, 피란민을 품어준 거제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눔의 삶으로 봉사하려는 다짐"이라고 설명한다. 흥남철수의 기억이 거제의 역사와 문화로 거듭났다.

한국 스포츠, '아시아 3강' 먹구름 몰려온다

2026 日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 성적표

밝음[明]보다는 어둠[暗]이 더 짙었다. 이제 좇음이 아니라 좇김이 두드러졌다. 명암의 교차 속에서, 3강의 위상마저 흔들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맞닥뜨려야 했던 2026 아이치(愛知)-나고야(名古屋) 아시안 게임(AG)이다.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대축제로 펼쳐졌던 2026 아시안 게임이 지난 10월 4일 막을 내렸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회원국이 대회 슬로건인 '이매진 원 아시아(Imagine One Asia)'를 좇아 16일간(일수 기준) 저마다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 무대였다. 이제는 세계 스포츠계의 거목으로 성장한 중국이 12연패를 이루며 아시아 절대 강자의 위세를 떨친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3위에 자리했다. 개최국 일본이 2위에 올랐고,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4-5위를 차지했다(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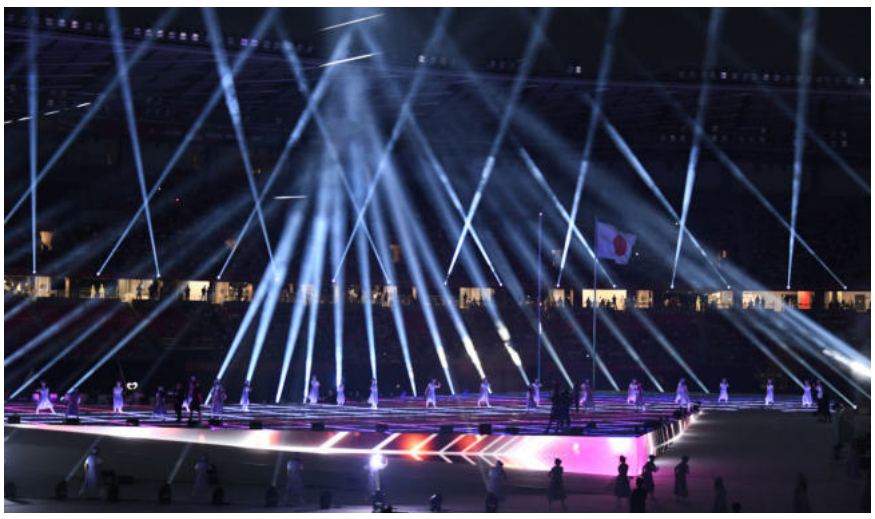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뼈저리게 냉정한 현실을 다시금 자각해야 했다. '체육 입국'을 부르짖으며 중국과 양강을 이뤘던 30여 년의 시기는 이제 아스라한 추억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Sport for All) 내지는 평생체육(Sport for Lifetime)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시대적 요구에 밀리며 후퇴를 거듭하는 모양새가 굳어져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한국 스포츠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어정쩡한 공존이 초래한 위기다. 갈수록 일본과의 격차는 커지며 중국→ 일본→ 한국 순의 자리는 고착화한 느낌마저 안 긴다. 오히려 세계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무서운 잠재력을 분출하는 인도(약 14억 8,000만 명)를 비롯한 후발 주자의 추격세에 휘말려 3위 수성도 위태롭게 보일 정도다(표 2 참조).

어둠 쪽으로 기울어진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도전의 길' 개척해야 하나?

이번 AG에서 한국은 금메달 39개를 획득했다. 1982 뉴델리 대회(28개) 이래 44년 만의 최저 수확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49개)부터 2022 항저우(杭州) 대회(42개)를 거쳐 이어지는 하강세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표 1. 2026 아시안 게임 메달 순위 5걸

순위	나라	메달 (금-은-동-종합)
1	중국	169-89-83-341
2	일본	83-95-91-269
3	한국	39-43-68-150
4	인도	21-27-37-85
5	우즈베키스탄	21-25-24-70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은 한국 스포츠에 여러가지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다. 45억 아시아인의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아 펼쳐진 이번 아시안 게임 개막식 모습이다. 김민제 사진작가 제공

물론, 이번 대회를 단순히 메달 획득의 성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스포츠가 어떤 종목에서 여전히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반대로 어디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지, 또한 미래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이번 AG에서, 한국 스포츠는 구조적 과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 연장선 위에서, 전통 강세 종목의 부진과 선수 육성 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세계최강' 한국양궁, 인도 돌풍에 2위 그쳐

엘리트체육-생활스포츠 어정쩡한 공존 위기감

새로운 국제 경쟁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도 분명 존재하기는 했다. 스케이트보딩에서 대회 사상 첫 금메달(강준이)이 나왔고,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테크볼에서도 초대 챔피언(이준석)이 탄생했다. 짧은 연륜을 딛고 첫 금메달의 개가를 올린 3×3농구(남자)와 2연패를 달성한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도 이를 입증하는 좋은 예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단체 종목의 선전 역시 눈여겨 볼만 했다. 남자 축구는 4연패의, 야구는 5연패의 개가를 각각 올리며 온 국민에게 기쁨을 안겼다. 농구는 남녀 동반 우승의 쾌거를 올렸다. 여자 핸드볼은 2연패를 노리던 일본을 안방에서 무너뜨리고 8년 만에 정상을 다시 밟았다. 펜싱은 남녀 사브르 단체전에서 함께 금메달 밭을 일궜다.

그러나 이런 밝은 요소를 상쇄하고 남는 어두운 요소가 한국 스포츠에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첫째, 금메달 수에서 나타난 경쟁력 변화다. 2022 대회와 비교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금메달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4년 전 10개(42-52)에서 44개(39-83)로 4배 이상 그 차가 커졌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인도의 금메달 격차는 18개(39-21)로, 일본과 차의 40.9%에 불과했다.

둘째, 엘리트 스포츠가 고비에 처했음을 뚜렷하게 드러낸 전통 강세 종목의 부진이다. 세계 최강 양궁은 인도(금 5개)의 파도에 휘말려 2위(금 3개)로 내려앉았다. 특히, 양궁이 AG에 도입된 1978 방콕 대회 이래, 한국 여자가 리커브에서 단 한 개의 금메달도 획득하지 못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안겼다. '종가(宗家)' 태권도는 비록 1위(금 3개)에 오르긴 했어도, 비중은 전체 금메달(11개)의 27.3%에 그쳤다. 8개 금메달이 걸린 이 종목 겨루기에서, 단 1개(송다빈·여자+67kg급)만 따낸 점은 무척 아쉬웠다. 2022 대회 때 2위(금 6개)로 도약했던 수영은 단 1개(4위)의 금메달 흉작에 그쳤다. 이 밖에 사격(금 3개), 유도(금 1개) 등은 메달 종목으로선 안정적인가 하는 의문을 남겼다.

셋째, 메달리스트와 선수 육성 시스템 사이의 간극이 노출됐다. 한두 명의 뛰어난 선수가 있다고 해서, 종목 전체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다. 이 맥락에서, 선수 육성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은 한국 스포츠에 제시된 화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 선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후속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선수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과학적 지원 체계 강화 또한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2026 AG에서 빚어진 한국 스포츠의 명암은 앞으로 무엇에 집중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실히 말해 준다. ▲ 종목별 경쟁력의 정확한 진단 ▲ 지속 가능한 선수 육성과 투자 ▲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재점검 ▲ 메달 중심 평가에서 영속성을 띤 스포츠 발전으로 방향 전환 등이 하루바삐 이뤄져야 한다. 어리석음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나타난 한국 스포츠의 명암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당위성의 배경이다..

표 2. 대한민국 역대 아시안 게임 성적

순위	대회
2위 (9회)	1966 방콕, 1970 방콕, 1986 서울, 1990 베이징, 1998 방콕, 2002 부산, 2006 도하, 2010 광저우, 2014 인천
3위 (8회)	1954 마닐라, 1958 도쿄, 1978 방콕, 1982 뉴델리, 1994 히로시마,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 2026 아이치-나고야
4위	1974 테헤란
6위	1962 자카르타

최규섭 ㈔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스포츠 저널 코리아』 편집인 & 편집위원장

회우가 낸 새책

‘언론계 거목들’ 8집 출간

대한언론인회 근현대사 빛낸 열분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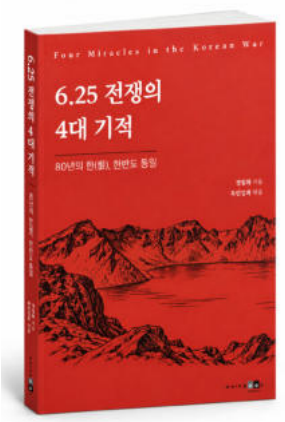


본회는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면서 한국 언론문화 발전에 충추적 역할을 해온 언론인 열분의 발자취를 담은 ‘언론계 거목들’ 제8집을 출간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펴낸 이 책에는 언론, 문화예술, 정무장관을 섭렵한 여걸 조경희, 지성과 패기로 정론을 펼쳐온 사표 양호민, KBS초석을 쌓고 증흥다진 방송계 거인 최세경,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지식인의 초상 신범식, 남북적십자 평양회담 취재 등 탁월한 언론인 이광표, 반세기 언론계, 관계, 정계누빈 거인 이웅희, 최장수 MBC사장, 대중문화 꽃피운 이환의, 격동의 현대사 속에 언론정도 지킨 거인 권오기, 해박한 문체와 지혜로 한국인의 얼 깨우친 이규태, 애국애족위해 종횡으로 시대누빈 큰별 현소환 등 열분의 언론인생, 열정의 발자취를 엮어 펴냈다.

J.M미디어 발간 국판 304면

한국전쟁의 4대 기적 재조명



6·25전쟁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의 계획으로 따지거나 철저한 준비과정으로 따지면 그때 전쟁으로 한반도가 백으로든 흑으로든 통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때 통일이 안 된 것이 이상할 정도로 통일의 기운은 무성했다. 밀어붙이는 쪽의 힘과 계획이 너무 완벽해 밀리는 쪽이 도무지 버틸 수가 없는 형편 이었다. 그러나 그런 힘과 계획은 결정적인 순간에 꺾이곤 했다. 왜 그런 터무니없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한국전쟁의 물결을 바꾼 기적은 네 번 있었다. 그 4대 기적을 엮었다.

기적 1 ; 유엔의 한국방어 결의안, 기적 2 ;워커의 순환방어의 기적, 기적 3 ; 강력한 정찰과 지평리 전투, 기적 4 ; 이승만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 등 전 4장으로 이어지며 부록으로 맥아더 38선 통일전략의 과오와 6.25 전쟁 영웅들의 증언까지 듣는다. 5페이지에 달하는 참고문헌과 찾아보기까지 곁들였다.

정일화 지음 신국판 262페이지 도서출판 아이워크북뒤

울진 시골마을 두곡동 조상들의 삶



두곡동은 조상들이 200년간 터를 잡고 살았던 곳으로 네이버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진의 오지인 시골이다. 그곳에서 태어나 사업해서 큰돈을 벌었다. 집안사정으로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서울의 가내공장에서 일하면서 중·고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공부했다. 30살에 고려대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뒤늦게 대학을 졸업했다. 학원사업으로 돈을 벌고 보니까 집안 어른들의 가르침인 ‘베풀고 덕을 쌓아라’가 가슴에 들어왔다.

조선족 학생들에게 매년 100명씩 선발하여 20년간 2천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올해 성묘 때는 경주이씨 판서공파 집안사람 수십명을 고향의 호텔에 초대하여 1인당 50만원씩 돌렸다.

‘두곡동 아리랑‘은 자서전이 아니다. 자식을 잘 기르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세 번 째는 조상을 추모하는 방법을 나 스스로 실천하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명희 지음 4x6배판 72페이지 비매품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6.9.23 ~ 2026.10.25〉〈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유한준 부회장 50년사 협찬금

1,000,000원



김용발 본회이사 찬조금

1,000,000원

최광일 60,000(25-26)

박현수 30,000(2026)

조원석 30,000(2027)

회우동정

권혁승 백교문학상 시상식



권혁승 본회원로상임위원(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은 지난 10월10일 강릉시 죽헌동 사모정 공원에서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백교효문화 선양회 주최로 오죽헌 시립박물관~사모정공원까지 1.5km를 걷는 어머니길 걷기행사를 가졌다. 이어 핸다리마을 사모정공원에서 제17회 백교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백교문학상은 백교효문화선양회 권혁승 이사장이 20년전 사비로 사모정공원을 건립, 조성하여 강릉시에 헌정하고 백교 문학상을 제정하여 17년째 공모, 시상하고 있는 상이다.

만보회, 경희궁 ‘소풍’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지난 10월20일 서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모임을 경희궁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가졌다.

경희궁은 조선의 5대 궁궐 중 하나로 광해군 때 창건하여 고종 때까지 사용한 곳으로, 다른 궁궐들에 비해 한적하고 조용하여 도심 속 숨은 산책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경희궁 산책 후 회원들은 근처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을 들러 ‘서울 도시계획 대관람’을 천천히 돌아봤다.

이날 참석자는 강두모, 김홍운, 김휴선, 설임윤, 안종우, 안홍렬, 이우진, 장 옥, 조명동, 조희곤, 최귀조, 최영배, 황우연

‘새로운 안보전략’ 논문헌정



이상우 본회회우(신아시아연구소이사장, 전 한림대 총장)의 ‘새로운 안보전략 짜야 할 때다’ 논문이 헌정 2026년 10월호의 ‘한반도 안보지형 특집’ 머리글로 소개되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용수 회우 (한국경제 편집국장대우)
2026년 6월4일 별세 향년 87세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이 종 세
· 사무총장·상임이사 박 종 서
· 주 필 이 도 선
· 편집위원장·이사 이 재 호
· 편집국장 송 창 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기자의 혼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투어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03호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K·스포츠 크리에이터

스포츠와 문화, 교육과 산업을 융합한 창의적인 K-스포츠로
KSPO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 스포츠 사업을 탄탄하게 | 스포츠 재정을 든든하게

•스포츠 복지 •스포츠 산업 •올림픽 유산 •체육인재 육성/지원 •기금조성사업 •KSPO스포츠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